

KINU 연구총서 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 김장호 · 제성훈

KINU 연구총서 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예원기획 (02-745-8090)

ISBN 978-89-8479-719-2 93340

가 격 ₩6,00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ix
I. 서론	1
II.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역내 에너지 지정학	9
1.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	11
2.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24
III.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과 협력의 요인	31
1.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과정	33
2. 남북러 가스관 협력의 요인	46
IV. 남북러 가스관 중단 이후 경쟁과 갈등의 지정학	59
1. 중국의 한중러 가스관 협력 제안	62
2. 러시아의 입장 변화 가능성	69
3. 일본 변수의 확대	74
4. 남남갈등과 미국의 부정적 입장	79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V. 남북러 가스관의 의미와 역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	85
1.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촉진제	87
2. 에너지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의 기폭제	94
3. 정책적 고려사항	101
참고문헌	1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7

표 목 차

<표 III-1> 동부가스프로그램(EGP) 전후의 러시아 가스사업의 특성변화	39
<표 III-2> 한·러 가스산업 협력 협정 주요내용	41
<표 III-3> 한·러 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42
<표 IV-1>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관계 비교	70

그림 목 차

KINU 연구총서 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그림 III-1> 제1단계, 야쿠츠크 가스전 구상도	34
<그림 III-2> 제2단계, 이르쿠츠크 가스관 예상 노선도	35
<그림 III-3> 러시아의 극동 가스관 구상도	37
<그림 III-4> 동부가스프로그램(EGP) 노선도	40
<그림 III-5> 남북러 가스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	43
<그림 III-6> 북한 통과 러시아 가스관 도입 계획도	45
<그림 IV-1> 중국 서기동수 노선도	65
<그림 IV-2> 중·러 가스관 동선과 서선	65
<그림 IV-3> 중국 제안 한중러 가스관 노선	68

요 약

세계경제의 중심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의 아킬레스 건(Achilles' heel)은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러한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은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기본 구도라 할 수 있다. 즉,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도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새로운 협력이 시도되었지만, 북한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협력의 이니셔티브 추진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중단된 이후, 관련국 및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변화하면서 남북러 가스관의 성공적 추진에 방해가 될 동북아 에너지 갈등(경쟁)의 지정학이 재현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자국 주도의 가스관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라는 거시적 배경도 우리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부의 입장 조율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북러 가스관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의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도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 구도 속에서 남북러 가스관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왜 남북러 가스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찰하고 이를 통해 남북러 가스관의 의미와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러 가스관이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을 노정하는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조를 극복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동시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남북러 가스관이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문제를 제기한다. 2장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 역내 에너지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과 ‘갈등’의 혼재라는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역사를 고찰했다. 고찰 결과, 동북아 지역은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의 요소가 다른 지역보다도 강한 편이었다.

3장에서는 에너지 갈등과 경쟁이 심한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협력이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협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러 가스관의 추진과정을 역사적 관점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러 가스관의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이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한국, 북한, 러시아의 지정학·지경학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태생적으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설정하고, 남북러 가스관 추진 중단 이후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동북아 각국의 이해와 입장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갈등의 지정학이 재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의 새로운 한중러 가스관 노선 제안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였고, 그 밖에도 일본의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가속화 추세 변수, 러시아의 입장 변화 가능성, 국내의 남북러 가스관 추진 관련 의견 갈등, 미국의 이해와 입장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이 또 다른 경쟁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선도하는 역내 다자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이 북한을 다자간 협력에 참여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북아 긴장 고조의 핵심요인인 북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남북러 가스관을 재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남북러 가스관,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Abstract

The Geopolitics of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Though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once tried to cooperate on a new regional energy project of building natural gas pipelines via the Korean peninsula, the risks in North Korean issues have hindered further dialogues and the work has become bogged down. Moreover, the changing dynamics among relevant states is facilitating the resurgence of energy conflicts in the region. China, specifically, is proposing an alternative route passing through its mainland, and Japan is accelerating cooperation with Russia to prevent China from tak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regional energy politics. The U.S.-led reformation of regional security structure is also exerting a negative effect on the progress of the gas pipeline project, and Russia may alter its decision depending on the change of the future energy and security environments.

Then, how do we analyze, understand and foresee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its future aspects? This study aims to specify and reevaluate the necessity for South Korea of promoting the gas pipeline project with Russia and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circumstance of energy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and considering its historical contexts.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can turn the current zero-sum situation among regional powers into a win-win situation by overcoming structural obstacles of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For the President Park Geun-hye's regime, the gas pipeline project will be an important policy measure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trust-building process,"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plans," and "Eurasia initiative plans."

Key words: Russo-Korean gas pipeline, Energy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plans

I

서론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위한 협력 사업 구상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조망되어 왔으며, 2008년 한·러 간 가스관 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제고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체제불안 및 군사적 모험 등 남북관계의 급랭과 이에 따른 북한 관련 리스크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답보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갈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남북러 가스관이 성사될 때 나타날 경제적·정치적 기대 효과에 대해 집중해왔다.¹ 다수의 연구보고서들이 남북러 가스관이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했던 북한리스크의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이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김정일의 사망, 김정은의 등장 등 북한 내부 상황이 급변했고, 이어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새로운 화해 협력의 시도로 인식되어 온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제대로 삼을 떠보기도 전에 그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러시아의 가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북한문제가 복잡하니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즉, 남북

¹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윤식,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윤성학, “남북러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우,” 『러시아연구』, 제22권 2호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2012), pp. 259~280; 한중만 외, 『남·북·러 협력 사업의 시발점: 가스관 프로젝트』 (서울: 푸른길, 2012).

I
II
III
IV
V

관계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차차 가스관 연결 문제를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시간이 늘 우리 편은 아닐 수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이러한 인식은 너무나 안이할 수 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잠정 중단 상태로 들어서자 동북아 국가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이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제기한 북한을 배제한 한중러 가스관 사업이다. 즉 남북러 가스관이 북한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지니, 차라리 러시아 가스를 중국과 서해를 통해 한국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떠나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우리에게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또한, 러시아 일부에서도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관련 인사 및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미온한 태도를 비판하고, 러시아가 남북러 가스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²

무엇보다 러시아 천연가스 확보를 두고 주변국들의 경쟁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3월과 4월 중러, 일러 정상 회담에서 양자 간 에너지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 그간 중·러 간에는 가스가격 협상의 난항으로 가스 협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 진단이 있었으나, 최근 중·러 간 정치 협력이 확대되고, 중국의 에너지 확보 위상이 제고되면서 협력의 급진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스 수요의 급증에 대한 대비로 러시아와의 가스 협력에 적극성을 보였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지만,

² 2013년 10월 APEC 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대신 동해 해저 통과 가스관 건설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밝힌바 있다. “푸틴, 한국수출용 가스관 동해 해저따라 건설 가능,” 『연합뉴스』, 2013년 10월 7일.

중·일 양국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러시아 동부와 사할린 지역이라는 점에서 남북러 가스관과 이해관계가 겹칠 수밖에 없다.

원래 에너지 협력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에너지자원의 성격 때문이다. 에너지는 전략적 재화(Strategic Commodity)로서 경제적 논리 외에 외교 안보적 논리를 동시에 포함한다. 즉 석유나 천연가스의 경우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거래되는 경제적 재화인 동시에 한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이기도 하다. 이 재화는 한정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상호 간 경쟁의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교 안보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성격 때문에 에너지 관련국들 사이에서는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상호 갈등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한다.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 대소비국들의 주요 무대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의 약 27%에 이르고 있으며(미국 19%, EU 14%, 러시아 6%),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200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 역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도발을 핵과 에너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 문제를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는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고, 에너지 안보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북아 지역은 지역 내 협력 기제가 부재하여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I
II
III
IV
V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천연가스는 전 세계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서 2035년에는 25% 비중까지 증가할 것이고, 2030년경에는 석탄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하마’인 중국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마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이다.³

한편, 러시아는 가스 공급국으로 경제적·정치적 이익 획득을 위해 가스 수입국들의 경쟁상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향후 가스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 잠정 중단과 러시아 가스 확보를 위한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움직임은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불가능한 것일까?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에너지 협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자원국을 포함해서 소비 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체와 정치공동체가 완성되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제와 구상들이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법 또한 없다. 특히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에너지 대소비국인 한국, 그리고 에너지 빈국으로 동북아 안보의 위협자인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에너지 다자협력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과 관련된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존의 남북러

³ 백훈,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정책적 접근,”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4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1), pp. 96~97.

가스관 사업에 대한 단순한 정치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벗어나 남북러 가스관과 관련된 좀 더 큰 틀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러 가스관을 포함해서 동북아 역내 각국들의 에너지 협력과 경쟁은 단지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과 그와 관련된 동북아 각국들의 행보를 지정학적인 측면과 지경학적인 측면 등에서 다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남북러 가스관 협력의 추진과정, 중단 이유, 그리고 새롭게 전개되는 주변국들의 이해와 행보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러 가스관이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재고찰하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방법론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찰하고 이를 통해 남북러 가스관의 의미와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특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각국들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특징이 왜 협력보다 갈등 위주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조에서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다자 협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추진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지정학·지경학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4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협력 잠정 중단 이후의 상황으로 동북아 에너지와 관련 갈등의 지정학이 재현되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중단 이후 관련국들의 새로운 이해관계 출현과 갈등과 경쟁 가능성의 확대에 대해 주로 논할 것이다. 5장은 남북러 가스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찰의 장으로 남북러 가스관이 동북아 에너지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추동하며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며 글을 맺을 것이다.

II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역내 에너지 지정학



1.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

가. 러시아⁴

1999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고 에너지가격 상황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의 해외 수출을 통해서 매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정부의 재정수지와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었고, 가계소득과 소비도 증대되었다. 인플레이 압력과 루블화 가치 상승이라는 복병이 있었지만 러시아 경제는 당시 연평균 약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시켰다.⁵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의존도와 정부 정책에서 에너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졌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2003년 8월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에너지 정책 목표를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내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증대에 두었다. 당시 푸틴 정권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에너지자원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4. 구 소련은 1970년대 중반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국이 되었으며 1993년에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Marshall Goldman, “Russian Energy: A Blessing and a Curs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1 (Fall 1999), p. 75.

5. 2000년대 중반 러시아 경제상황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V. Popov, “Resurgent Russian Economy? Putin’s Policy without Putin?,” *International*, Vol. 63 No. 2 (2008), pp. 247~262.

6. Andreas Benedictow, Daniel Fjærtøft and Ole Løfsnæs, “Oil dependency of the Russian economy: An econometric analysis,” *Economic modelling*, Vol. 32 (2013), pp. 400~428.

I
II
III
IV
V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푸틴 정권은 에너지자원 활용을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증대에만 국한시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⁷ 더불어, 러시아 정부는 수송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1) 에너지자원의 수출시장 다변화; 2) 수출수송시스템 확대; 3) 수출방식의 다각화; 4) 자원수출 외교 등.⁸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의 대 동북아 전략도 새로운 대규모 에너지 수출시장 진출과 이를 통한 러시아 동부지역 경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위상 증대로 전환되었다. 동북아 지역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은 현재 러시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사업들의 대부분이 동 지역에서 현재 계획·추진되고 있다. 특히, 동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스자원을 국내는 물론, 동북아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송망 구축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들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다자간(Multilateral)’ 협력보다 ‘양자간(Bilateral)’ 협력을 고수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이미 오랜 기간 진행해 온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 협력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소비국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급자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

7. 러시아와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장덕준, “러시아와 동북아 지역협력: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6), pp. 190~196.

8. А.Г. Корнеев, К.А. Корнеев, и С.И. Виолин, *Основные Механизмы Реализации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Энергетики* (Регион: Экономика и Социология, спецвыпуск, 2010), pp. 286~304.

의 양자 간 협력 전략은 동북아 역내 에너지 사업을 다자간 협력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⁹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거대한 에너지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의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1993년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석유소비량은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으며, 천연가스의 소비는 매년 7~10%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¹⁰ 중국 정부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리펑 전 총리가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9.11테러의 후속조치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취한 일련의 외교·군사적 대응조치를 보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하였다.¹¹

중국의 대외 에너지 정책 목표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급

9. 권원순·민충기, “러시아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체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비교경제연구』, 제13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6), pp. 199~222.

10. Chun Chun Ni, “China’s Natural Gas Industry and Gas to Power Generation,” *IEEEJ Energy Journal* (July 2007) 참조.

11. 중국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은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소비 구조변화 외에도, 국내에서의 에너지 생산 감소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의 해외의존 증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동북아협력문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pp. 211~233.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며, 후자는 해외 에너지원의 다원적인 개발이다. 중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자원 부존국과의 협력 강화와 해외 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우선, 중국의 핵심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 중 하나는 산유국과 천연가스 생산국 등 에너지 생산국과의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전통적 외교수단 동원 전략이다. 이는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에너지 외교’를 적극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이 같은 외교적 전략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에너지자원 생산·수출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관계 구축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은 제3세계 국가들로 중국은 이 국가들과의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외교적 지지를 표명하고 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해외 에너지자원 공급을 다원화하고 수송 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한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 지원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1998년 중국 석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본격적으로 해외 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서의 중동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해외 에너지자원 공급의 다원화는 곧 수송 채널의 다양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해외 에너지자원 공급의 다원화를 위하여 북미, 중앙아시아, 카스피안(Caspian),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 중·남미, 아프리카와 동남아

¹² 중국의 에너지전략과 에너지외교에 관하여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현진, “중국의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안보 전략: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석유』, 제22권 1호 (한국 석유공사, 2006), pp. 94~111; He Jiankun, Yu Zhiwei and Zhang Da, “China’s Strategy for Energy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Energy Policy*, Vol. 51 (2012), pp. 7~13.

국가들과 쌍무차원에서 지역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을 향후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1990년대 중국은 러시아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신, 러시아산 석유의 안정적 수급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 당국의 보증을 토대로 러시아 기업과 에너지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당부분 러시아 원유가 철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공급되었고, 최근 중·러 간 송유관까지 개통되어 다량의 원유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석유가스자원 개발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¹⁴ 특히, 러시아-중국 간 에너지 협력은 2006년 3월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급진전 되었다. 중·러 양국 정상들은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전력과 원자력 분야 등에서 포괄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¹⁵

중국 시진핑 정부 역시 중국 경제의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능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시진핑 정부 정책이 에너지 관련 국유기업 개혁 등 친(親)

13. 중국이 해외 원유 수급루트의 다양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원유 수입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중동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원유 도입 물량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24%, 아태지역 국가들이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alysis: China September 4, 2012,"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China/china.pdf>> (검색일: 2013.10.20).

14.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II』 (산업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2006. 4), pp. 11~12.

15. "중·러-러시아 '에너지 협력' 정상회담," 『한국경제』, 2006년 3월 20일 기사 참조.

시장적인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서 전력,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가격 부문의 개혁이 보다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확보 행보는 더욱더 다변화되고 경쟁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중국의 주변부 지역에 대한 투자 결과가 자국 내 가스관 인프라 건설과 연계되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¹⁶

다. 일본

일본은 주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다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원 다원화와 해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주도 개발 에너지원 확보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¹⁷

일본은 1960년대 이후 에너지 공급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까지는 중동지역 유전개발 투자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아시아 지역과 호주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¹⁶ 보다 자세한 분석은 4장 참조.

¹⁷ 일본은 국내 석유자원의 부족으로 정부지원을 통한 해외 석유 탐사 및 생산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에너지 전략계획의 수립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 탐사 및 개발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전체 원유 수입물량에서 해외직접 생산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19%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alysis: Japan Jun. 4, 2012,"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JA&trk=p2>> (검색일: 2013.10.20).

한편 일본정부는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을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권장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2월 일본석유공단(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 JNOC)과 금속광업사업단(Metal Mining Agency of Japan: MMAJ) 등을 통합하여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JOGMEC)'를 설립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는 에너지의 자국 주도 개발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개발기업 육성, 개발기업의 자립적인 사업 전개,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 그리고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의 전략적인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는 카스피해 카샤간(Kashagan)유전(카자흐스탄)과 ACG유전(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 내 사할린- I, II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대 동북아시아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미국의 대중 에너지 정책과 충돌되지 않은 선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중·일 간 협력에 있어서 미국 변수 이외에 양국 간에 과거청산 문제, 역내 패권 경쟁, 그리고 동중국해 분쟁 등이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 경제의 불안정과 러시아와의 북방도서 영토분쟁 등을 이유로 동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에너지자원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도 이에 자극을 받아 동 지역 내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지리

I
II
III
IV
V

적으로 자국과 가까우면서 석유·가스 부존량이 풍부한 사할린 지역 개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사할린 육상유전에서 원유생산에 성공한 적이 있으며, 1974년부터 사할린 해양석유개발을 위해 일본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할린석유개발협력(Sakhalin Island Development Corporation: SODECO)’을 설립하여 사할린 프로젝트- I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이미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할린- I 과 II 프로젝트를 실현시킴과 동시에, 에너지의 자국으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¹⁸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로운 에너지·환경정책 방향을 검토해 왔으며, 2012년 9월 14일 ‘에너지·환경회의’에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채택하였다. 동 전략은 원전의 40년 가동제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확인을 한 원전만을 재가동하며, 원전의 신·증설을 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다. 또한 그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전 및 화석연료 의존도를 억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2030년대 원전 의존도 0%’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⁹ 이렇게 된다면 향후 일본은 부족한 에너지원 창출을 위해 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¹⁸ 김중일·성규열, “사할린을 포함한 극동 러시아지역 자원과 일본의 에너지 경제정책,” 『동북아문화연구』, 제1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pp. 445~462.

¹⁹ 그러나 2012년 9월 19일 각의에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참고문서로 다룬다고 하여, 문서 내용의 각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보류한 상태이다.

라. 미국

미국의 인구는 2013년 기준 약 3억 명 수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4.5%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러한 에너지 소비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²⁰

미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자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도입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문제가 야기되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수요-공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에너지 위기”의 문제를 에너지 안보와의 연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탈냉전기 지역적 중요성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지역적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단순화될 수 없었다. 즉 한국과 일본과의 가까운 동맹관계,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 그리고 북한의 핵·대량 살상무기의 획득 등을 고려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미국 정부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와 정치적·경제적으로 견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를 다양한 곳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중동과 같은 국지적 충돌이나 갈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벗어나 보다

²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nergy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Infographic,” <<http://www.cbo.gov/publication/43232>> (검색일: 2013.6.27).

I
II
III
IV
V

안정된 지역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은 시베리아 에너지의 개발에 정치적 관심이 있으며, 한국·일본과 같은 동맹 국가들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에너지 경쟁과 협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 한국

에너지원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에너지자원의 확보 및 관리 정책은 국제 유가의 변화, 환경문제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중점을 달리해왔다. 최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원의 유형별로 관리 대상을 나뉘가면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의 수립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 산업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자원을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관리 및 공급을 위하여 정부는 동력자원부를 설립하였고, 정책적으로 시장을 통한 경쟁보다는 독점적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전까지 계속되어 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 회복이 필요했던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정책기조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²¹ 특히 에너지산

업의 국내적 차원에서는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그 근본적인 방향이 변화되었다. 또한 에너지산업의 외적인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 협약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산업의 구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한국은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년)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석유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41% 이상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국내의 원전문제 등으로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원전의 비중을 20%선으로 유지하고, 대체제인 LNG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 2차 계획안을 최근 마련한 바 있다.²² 이는 원전이 가지는 ‘경제성’보다 ‘사회적 수용’과 ‘안전’에 비중을 두겠다는 뜻으로, 유류와 천연가스 등 대체제의 안정적인 수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정부 역시 창조경제를 위한 견인차로 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2013년 10월 16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모색’과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확충’을 강조한 바 있다.²³ 또한 박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전

21. 에너지경제연구원 『새천년을 향한 에너지 산업의 도전』 (의양: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참조
 22. “원전 확대정책 전면 수정…2035년 비중 40…20%대로,” 『연합뉴스』, 2013년 10월 13일 기사 참조.
 23.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세계에너지총회(WEC) 연설,” 2013년 10월 16일,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13.10.18).

략구상을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로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²⁴ 이를 통해 볼 때,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과 친환경 에너지 원 확보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 북한

북한 체제는 식량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산업 경제 및 생산 회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외화부족으로 연결되고, 이는 1960~1970년대 구소련 및 동유럽으로부터 도입된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가 불가능함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의 격감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석탄 및 수력에 주로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체계, 자율성이 없이 통제성만 강한 사회주의 제도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였다. 특히, 에너지 공급에 있어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 한 석탄 주도의 산업구조는 원활한 석탄 생산을 저해함으로써 전력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공업 생산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다.

1990년대 들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특히 구소련과 중국의 변화는 북한 경제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원조와 지원에 따라 건설된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발전연료인 석탄 생산은 부존량의 한계와 벌목에 의한 갭목 부족 및 노후화된 채탄설비 등의 이유로 격감되었다.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던 수력발전 역시 홍수

²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 2013년 10월 18일,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13.10.20)

로 인한 퇴적된 모래와 자갈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발전량이 감소되었다.²⁵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과 서방사회의 교류 차단으로 에너지 수입은 매우 미비하다. 북한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수입 에너지 비중은 5~1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과 수력발전량이 감소하면서 경제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벗어나지 못한 형태이다. 최근 북한 당국은 석유 및 가스의 이용 확대보다는 농가 부산물이나 자연친화적 동력원 개발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풍력·조수력·폐열·메탄가스 등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발전만으로는 획기적인 경제 회복이 가능한 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거나 남북러 가스관과 같이 에너지 협력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과 경제 회복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²⁶

²⁵ 북한의 연대별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수급 문제 등 전반적인 북한 에너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남성욱, “북한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전망,” 『국제평화』, 제2권 1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5), pp. 115~160.

²⁶ 북한의 에너지 수급 및 산업 실태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류지철·김경술, “에너지 위기와 북한 당국의 대책,” 『통일연구』, 제9권 2호 (숭실대학교 통일문제연구원, 2005), pp. 111~147.

2.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자의 이해에 따라 에너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배경이 되는 역내 질서는 생각보다 복잡다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냉전의 종식은 동북아 지역의 질서 형성 및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미·소 양극체제의 역할이 소멸됨에 따라 탈냉전시대와 달리 여러 가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 구도를 결정짓게 되었다.²⁷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념적 요소가 핵심이었던 냉전 시대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동북아 국가 간 역사적 적의와 갈등, 정치문화 및 환경의 상이성 등이 탈냉전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자본의 국제화와 확대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갈등보다는 협력의 요소를 보다 더 강조하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논법이라 하더라도,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문화를 지닌 국가들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에서는 단시간 내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²⁸

²⁷ 탈냉전시대 세계 안보상황의 다양한 양상은 다음을 참조할 것. F. Heisbourg, "A New Security Landscape: the End of the Post-Cold War Era," *Asia-Pacific Review*, Vol. 10, No. 1 (May 2003), pp. 52~63.

²⁸ 이러한 역내 국가 간의 갈등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현재의 주요 위협요인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2) 일본의 재무장 3)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시도 4) 한반도의 정세의 불안정 5) 지역전반에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서의 러시아의 재등장.

탈냉전 시대 국제정치에서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문제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각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위협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대국이 많은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이슈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안보적 측면에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 그 중요성이 빠르게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는 에너지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은 안정된 에너지 공급의 문제를 자국의 국가안보와 연계시켜 인식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각국 정부들은 동북아시아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에너지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지, 또한 그로 인해 심각한 분쟁이 생기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여전히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그 경제력에 기초로 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거대한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 진행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²⁹

결과적으로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는 2000년대 초 국제유가의 상승에 일조하였다. 에너지 생산국들의 새로운 연합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확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에너지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수차례에 걸친 에너지 파동을 경

²⁹ 최근 주요 지역별 에너지 소비현황(2010)을 보면 아시아·오세아니아가 193.616 Q.Btu로 전 세계의 약 37.92%, 유럽이 83.824 Q.Btu로 16.41%, 북미는 118.345 Q.Btu로 23.17%를 차지했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http://www.eia.gov/cfapps/ipdbproject/iedindex3.cfm?>> (검색일: 2013.10.20).

I
II
III
IV
V

협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미래의 에너지 안보분쟁을 예상하며 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⁰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문제는 각국들 간의 국가 전략적 이익의 변화 및 상호의존의 방향으로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문제는 협력보다는 갈등적인 요소를 보다 내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시안 프리미엄(Asian Premium)’이 그것이다. 아시안 프리미엄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 확보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배럴당 약 0.94 달러의 아시안 프리미엄이 존재하였고, 아시안 프리미엄이 없을 때에 비해 약 5,000억 엔에서 약 1조 엔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하였다.³¹ 이러한 현상은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 에너지 안보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지역협력 형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동북아 지역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지역 협력에 대한 일부 낙관론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 안보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적대적 요소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³⁰ 원유 파동(oil crisi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William F. Martin, Ryukichi Imai and Helga Steeg, *Maintaining Energy Security in a Global Context: a report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New York: Trilateral Commission, 1996); 에너지 안보와 그 위기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은 다음을 참조할 것. Douglas R. Bohi and Michael A. Toman with a contribution by Margaret A. Walls, *The Economics of Energy Securit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

³¹ 김현진, “Issue Paper-신에너지 위기요인과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3.6.12), p. 9.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 패러다임이 출현할 것인가? 현재 한·중·일 3국의 경우, IEA와 APEC 및 ASEAN+3의 틀 내에서 에너지 관련 아젠다와 역내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고위관료회의의 등이 열리고 있다. 또한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가 관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너지고위관료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가 있으며, 최근에 한·중·일 3국이 극동 및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³² 그러나 다자간 협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들은 주로 에너지 협력 기제(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자국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간접적 협력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다자간협력 보다는 주로 양자 간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³³ 무엇보다도 동북아 3국과 러시아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지역 협력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정부 차원의 협력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³⁴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의 발전 정도가 미흡한 이유

-
32.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Collaborative Mechanism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CNEA), 한중일 3자 에너지 대화(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Energy Dialogue), 5개국 에너지장관회의(The Five Country Energy Ministers Meeting) 등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이슈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대화 기구를 넘어서서 협력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재승,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EAI국가안보패널 보고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EAI NSP Report 46, 2011), p. 11 참조.
33.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양자주의의 한계와 다자주의의 형성 가능성에 관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안순철,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협력 레짐의 형성: 한국의 다자주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0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pp. 45~63.
34. 박성호, “동북아 지역 내 에너지안보협의체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GRI연구논총』, 제13권 11호 (경기개발연구원, 2011), pp. 107~108.

I
II
III
IV
V

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중국·일본 간 과거 역사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시아 각국은 역사적으로 심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여 왔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동북아시아 각국들이 서로 협력을 도모하는데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탈냉전 시대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적 동맹구조의 존재에 기인한다.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듯이, 1990년대 이후 동북아 지역 내 국제관계는 여전히 냉전적 질서인 한국·미국·일본 대 러시아·중국·북한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를 따라 양 진영은 에너지 안보적 차원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전략적 수송 루트를 두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등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보다는 갈등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러한 탈냉전 시대 동북아 국제 질서는 지역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역내 주요국들 간의 협력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과 러시아 등은 서로가 지정학적인 영토분쟁 중에 있다. 한·일 간의 독도 분쟁, 중·일 간 센카쿠 열도 갈등, 러·일 간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 등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지역 내 영토 분쟁이 역내 에너지 협력과 에너지 안보 협력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세계화의 조류를 따라 자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치·경제·안보적 지역주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지경학적 갈등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 경제협력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북아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중시하고 아시안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는 요인들 때문에 향후 에너지 문제를 둘러싸고 협력보다는 갈등이 확대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역내 에너지 협력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각국들이 자국의 이해만을 추구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분쟁적인 요소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느냐가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확보 문제가 각국의 국가안보 차원 뿐만 아니라 지정학·지경학적인 지역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문제에 관한 비협력적 경쟁관계의 지속은 결국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역내 각국들의 에너지 협력과 경쟁은 단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지정학적인 측면과 지경학적인 측면 등에서 다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한국·중국·일본 등 3국의 에너지 확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쟁구도이면서 정합게임(Constant-sum Game)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가 작동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과 중국은 러시아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상호 윈윈(Win Win)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더욱 더 추구하려고 한다면 용의자의 역설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만일 러시아가 중국에 중·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본에 공급될 수 있는 양은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양국은 협력보다 경쟁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³⁵

³⁵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에너지 사업과 일·중간 협력 가능성 연구: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2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7), pp. 348~379.

I
II
III
IV
V

이처럼 동북아 각국들의 에너지 안보 상황과 아시안 프리미엄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은 협력보다는 갈등을 노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북아 지역을 새롭게 중시하기 시작한 에너지 대국 러시아, 북핵 등 에너지 문제를 들고 동북아 안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온 북한,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절실한 한국이 참여하는 에너지 다자 협력이 그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도에서 어떻게 다자간 에너지 협력인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과 협력의 요인



1.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과정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구상은 1992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김달현 북한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문제를 논의한 것에서 출발하였다.³⁶ 이후 남북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당사국들은 동북아의 새로운 가스관 건설 등 에너지 협력 이슈에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남북러 가스관의 추진 과정은 역사적 관점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모색, 두 번째는 한·중·러 혹은 남·북·러 3자 협력, 세 번째는 러시아 극동 발전전략의 전환과 협력,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북한의 관심과 논의의 본격화이다.

가.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모색단계

1990년대 초 남북러 가스관은 한·러 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극비리에 논의되다가, 1992년 8월 김우중 전 회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하공화국 야쿠츠크(Yakutsk) 가스전 개발에 대한 협의가 진척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야쿠츠크 가스전 개발계획은 진임 전 동력자원부 장관과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연료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한·러 에너지자원협력 회담을 갖고, ‘사하공화국 내 천연가스 공동개발 관련 사항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본격화되었다.³⁷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대우, 현대 등 주요 기

36. “시베리아 가스관 북한경유 논의,” 『한겨레』, 1992년 7월 4일 기사 참조.

37. “한·러, 야쿠츠크 가스전 관련 의정서 서명,” 『연합뉴스』, 1992년 11월 20일 기사 참조.

I
II
III
IV
V

업들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미국이 참여하는 대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³⁸

● 그림 III-1 제1단계, 야쿠츠크 가스전 구상도³⁹



그러나 야쿠츠크 노선은 가스관이 북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 가스관 사업의 경제성 문제, 러시아 가스프롬의 가스 수출전략 변화 등의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었다.⁴⁰

38. “북한서 금강산 개성개발 제의,” 『경향신문』, 1992년 8월 26일 기사 참조.

3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러시아 극동지역 편람. 199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 337.

나. 한중러 혹은 남북러 3자 협력단계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요 충족과 가스 수입선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Irkutsk)주의 코빅타 가스전을 비롯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다. 한국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간 논의 중인 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연간 700만 톤의 이르쿠츠크 가스를 향후 30여 년간 LNG에 비해 평균 22~25% 가량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 동시베리아 지역의 이르쿠츠크(코빅타) 가스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⁴¹ 그러나 이르쿠츠크와 만주리, 선양, 다렌, 그리고 서해와 평택을 연결하는 총연장 4,300km의 이르쿠츠크 가스관 사업은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가스 수출전략의 변화에 따라 사업승인이 보류되었다.

●그림 III-2 제2단계, 이르쿠츠크 가스관 예상 노선도



40.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 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p. 34~47.

41. 산업자원부, 『100대과제 추진계획. 2001』 (과천: 산업자원부, 2001), pp. 298~300.

러시아가 이르쿠츠크 노선의 승인을 보류한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변화였다. 러시아는 실제로 2004년 1월 코빅타 가스전 개발(이르쿠츠크 천연가스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코빅타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전량 러시아 내수용이며,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에는 사할린에서 나오는 가스만을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빅타 가스전 개발이 무산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가 국내 에너지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⁴² 당시 러시아 가스관 건설에서는 주로 외국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러시아가 직접 개발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생겼다. 한국과 중국은 코빅타 가스전을 영국·러시아의 합작기업인 TNK-BP와 협력을 통해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러시아는 자국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을 앞장세워 이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이다.⁴³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변화는 독점가스 수출권법 제정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2006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8 정상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오자, 러시아는 오히려 가스프롬에 가스 독점수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할린-I, II 프로젝트 등 생산물 분배방식(PSA)으로 개발된 가스 이외의 가스는 가스프롬을 통해서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주요 내용이었다.⁴⁴

42. 이 밖에도 당시 일본이 가스관을 자국과 가까운 쪽으로 연결하고자 러시아를 설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러시아 에너지를 중국이 선점하는 것을 배제하려했기 때문이다. 가스관과 함께 송유관도 중국을 통과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 행을 결정한 이유이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관 중국~평택 안 거칠 듯,” 『중앙일보』, 2004년 11월 26일 기사 참조.

43. “미국이 꺼리는 사할린 프로젝트,” 『한겨레』, 2004년 10월 12일.

44.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가스산업 중심지였으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지역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변화에 따라 극동 가스관 노선 역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즉 중국을 통과하지 않고 자국 영토를 따라 건설되는 에너지 공급망의 실현이다. 이 공급망 구상은 이르쿠츠크 센터(코빅타 가스전)에서 시작해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동북아 3국을 상대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코빅타 가스전에 대한 한·중·러 협력의 무산과 러시아의 자국 주도의 극동 가스관 건설 구상은 향후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림 III-3 러시아의 극동 가스관 구상도



의 가스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가스대금 납부지연을 이유로 러시아가 한 차례 공급중단을 결정한바 있고, 2006년에는 가스공급 가격인상을 놓고 양국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2006년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가스시장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오히려 가스수출 창구를 가스프롬으로 단일화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가스 산업의 국가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정기철, “러시아 가스사업의 여건 변화 및 의미 분석,” 『계간가스산업』, 제7권 4호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2009), p. 9.

사실 코빅타 가스전이 무산되기 전부터 정치적인 목적에서 러시아는 중국이 아닌 북한 통과 가스노선을 검토해오고 있었다. 200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듬해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조건으로 사할린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하는 등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지를 보인 바가 있다.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관은 2004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시아 구상’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의 호혜적 협력 등에 합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양국은 또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을 비롯 석유·가스 운송 및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 양자 및 다자간 대규모 경제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⁵ 이는 양국이 가스 공급 분야에서의 협력을 뛰어넘어 가스의 생산과 운송, 다자간 에너지 인프라 개발·협력을 포함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 러시아 극동 발전전략 전환과 협력단계

러시아는 2007년 9월 극동 시베리아의 내수공급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사할린과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의 4개 가스 생산센터를 개발하여 이들을 하나의 가스 배관망으로 연결하는 동부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을 승인하였다. 동부가스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극

⁴⁵ “한·러 정상, 포괄적 동반자관계 선언,” 『연합뉴스』, 2004년 9월 21일 기사 참조.

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여 러시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동부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내수 및 수출 등을 통해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분을 확충하려는 전략을 견지하였고, 당연히 주변 경제대국인 한·중·일 등 동북아 유관국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⁴⁶

● 표 III-1 동부가스프로그램(EGP) 전후의 러시아 가스사업의 특성변화⁴⁷

구 분	EGP 이전	EGP 이후
추진 주체	민간사(RP) 지방정부	가스프롬, 연방정부
사업 성격	개별, 독립 프로젝트(PNG)	통합프로젝트 (PNG, LNG 등)
연방정부 지원	제한적	적극적

동부가스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르쿠츠크 센터의 코빅타 가스전과 크라스너야르스크 센터를 연결하여 러시아 동부지역의 내수공급에 이용하고, 야쿠츠크 센터의 차얀다 가스전과 사할린 센터의 사할린-Ⅱ, Ⅲ 가스전을 개발하여 차얀다-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I
II
III
IV
V

⁴⁶-Gazprom, “Eastern Gas Program,” <<http://www.gazprom.com/about/production/projects/east-program/>> (검색일: 2013.7.16).

⁴⁷-정기철, “러시아 가스사업의 여건 변화 및 의미 분석,” p. 9.

그림 III-4 동부가스프로그램(EGP) 노선도⁴⁸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 동부가스프로그램의 완성과 성패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였다. 러시아 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한·러 간의 구체적인 협의는 지난 2006년에 시작되었다. 한·러 양국은 2006년 이월결 전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마테로프 전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 간 ‘한·러 가스산업 협력 협정’에 따라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후 2년여에 걸쳐 진행된 한·러 가스 협력 협상을 마무리하고, 러시아 가스전 개발과 가스 도입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하고, 액화천연가스 및 압축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건설과 가스 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⁴⁹

48. 가스프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Gazprom』, “Eastern Gas Program,” <<http://www.gazprom.com/about/production/projects/east-program/>> (검색일: 2013.10.22).

이후 한·러 양국은 2007년 양국 간 PNG 도입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은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연간 10bcm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공급받기로 합의하고⁵⁰, 러시아 측이 제안한 대로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우선 건설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표 III-2 한·러 가스산업 협력 협정 주요내용⁵¹

공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가스 산업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Gas Industry)
서명주체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제2차관 -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
주요협력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 ◦ 액화천연가스 및 압축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 ◦ 가스 산업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 ◦ 가스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개·보수 및 운영 ◦ 가스전의 시굴, 탐사, 개발 및 운영 ◦ 가스 산업에 적합한 법적 틀 조성
가스공급 및 구매	◦ 양국의 국내법 및 본 협정에 따라 수행(단일수출 경로정책)
위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한국가스공사 ◦ 러시아: 가즈프롬

49.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년여 협상 끝에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http://www.mke.go.kr/news/coverage/bodoView.jsp?>> (검색일: 2013.6.28).

5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 추진,” <<http://www.mke.go.kr/news/coverage/bodoView.jsp?>> (검색일: 2013.7.1).

51.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년여 협상 끝에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http://www.mke.go.kr/news/coverage/bodoView.jsp?>> (검색일: 2013.6.28).

I
II
III
IV
V

● 표 III-3 한·러 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주요내용⁵²

가스 도입량	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30년에 걸쳐 연 10bcm(LNG 환산시 약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함.
노선	◦ 러시아가 제안한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추진
협력 규모	30년간 천연가스 구매액 900억 달러,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 달러 북한을 경유하는 PNG배관 건설비 30억 달러 등 총 사업규모 1,000억 달러 이상
도입계획	◦ 2008~2010: 북한을 통과하는 한-러간 배관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 2010: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간 최종계약 체결 ◦ 2011~2014: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 배관 건설 ◦ 2015 이후: 러시아 PNG 도입 예정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의 지하핵실험과 UN의 대북제재, 그리고 2010년의 5·24 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 논의는 표류하게 되었다.

라. 북한의 관심과 논의 본격화 단계

표류하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다시 관심을 보인 것은 의외로 북한이었다. 북한 수뇌부가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주체 간 협상 채널이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의 러시아 올란우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업 추진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

⁵²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 추진,”
 <<http://www.mke.go.kr/news/coverage/bodoView.jsp?>> (검색일: 2013.7.1).

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변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 부가 직접 UN 대북제재와 한국의 5·24 조치는 가스관 협력과 무관하며,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다.⁵³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북·러 3자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9월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밀러 가즈프롬 회장, 그리고 북한 김희영 원유공업상 사이의 연쇄 회담이 개최되고 실무 협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2011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남·북·러 PNG 사업의 추진 로드맵에 합의함으로써 2016년 12월까지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북한 경유 가스관 공사 건설을 완료한다는 일정표를 재확인하였다.⁵⁴

●그림 III-5 남북러 가스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



53. “정부, 남북러 가스관, 대북제재 대상 포함안돼,” 『아시아투데이』, 2011년 9월 5일 기사 참조.

54. OAO Gazprom, *ANNUAL REPORT 2011* (Moscow: Gazprom, 2011), p. 56.

러시아는 2011년 남·북·러 3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북한에 러시아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키고 이를 가속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러시아는 2012년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포함하는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양국 사이의 협력 증진을 위해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한·러 정상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비롯한 과학기술, 우주산업, 극동·시베리아 인프라개발 등 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원만한 남북관계가 러시아 극동 개발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 협력의 증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⁵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사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가스관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도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에 소련시절 부채의 약 90%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 개발 프로젝트에서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러시아는 북한과 2012년 9월 모스크바에서 북한에 제공한 차관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는 채무조정 협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차관을 양국 간 합작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합의⁵⁶함으로써 사실상 구 소련시절 부채의 100%를 해결해주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사업추진에 내부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가스관 노선의 북한 통과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55. “한·러 정상, 남북러 가스관 사업 협력 약속,” 『연합뉴스』, 2012년 9월 8일.

56. “Russia writes off 90 percent of North Korea’s debt,” *Reuters*, September 18, 2012.

그러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이 지속되고 한-러 등 당사국들이 가스관 사업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다시 난항에 빠졌다.

그림 III-6 북한 통과 러시아 가스관 도입 계획도⁵⁷



57. 지식경제부 자료를 재구성. 지식경제부,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 추진,” <<http://www.mke.go.kr/common/jsp/fileDownloadOrg.jsp?>> (검색일: 2013.6.17).

2. 남북러 가스관 협력의 요인

남북관계의 반복적 위기와 동북아 에너지 환경의 경쟁과 갈등 구도 속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 협력 구상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 이해 당사자인 한국, 북한, 러시아의 공통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의 이해를 크게 지경학·지정학적 편익의 두 가지 시각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가.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에 대한 이해

(1) 지경학적 편익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제발전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지만 인구밀도가 극히 낮고,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취약해 인프라 건설 및 천연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인접한 동북아 지역 경제체제에 편입이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경제의 1/5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지역경제 간 부존 요소가 상호보완적이므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⁵⁸ 그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1) 석유파이프라인망 2)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을 포함하는 가스파이프라인망 3) 전략망 연계 등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⁵⁹

⁵⁸ 윤정숙, “남·북·러 에너지 협력방안,” (통일부, 2007), p. 21.

⁵⁹ 위의 글, pp. 22~23.

특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세계 가스 소비시장이 위축되자, 세계 제1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조차도 새로운 가스 수출선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었다. 새로운 수출선은 당연히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뛰어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중시였다.⁶⁰ 러시아의 에너지전략에 따르면 총에너지 수출 대비 석유는 약 25%, 가스는 약 20%까지 아시아로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기로 계획했다.⁶¹ 이러한 맥락 속에서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동북아에 대한 가스 수출 확대 목표가 생겼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가스 가격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고, 중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레버리지로서 새로운 가스 수출선의 확보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남북러 가스관이었다. 중·러 간 가스 협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도입가격과 노선에 대한 견해차로 성과가 크지 않았다. 러시아는 유럽시장에서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중국은 중앙아시아 등 이미 다양한 가스 공급 루트를 확보한 상황에서 불리한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표출하고 협상력

60. 최근 러시아 가스는 유럽 가스 시장에서 유럽 내 노르웨이 가스와 카타르산 LNG, 그리고 북서아프리카산 LNG와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가스수요 감소, 북미지역에서의 셰일가스 개발 붐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 여건과 푸틴 집권 3기의 에너지 수출전략: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4권 2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2012), pp. 205~206.

61. 한중만 외, 『남·북·러 협력사업의 시발점: 가스관 프로젝트』, p. 86.

I
II
III
IV
V

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과거 2000년대 초반 ESPO(Eastern Siberian Pacific Ocean) 송유관 노선 결정 때처럼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스 소비국들의 경쟁구도를 유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⁶² 즉,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일본 측에는 블라디보스토크 LNG 사업을 동시에 제안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소비국들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경쟁구도를 확대하고, 이를 러시아의 가격 경쟁력 확보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⁶³

동시에 러시아가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에 성공했을 경우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가스 사업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편익이 있을 수 있었다. 더구나 북한의 대중국 의존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 경제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역시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었다.

(2) 지정학적 안보: 정치적 포석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안보의 측면에서 편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우선 러시아의 극동전략의 내실화와 기능주의적 남진정책이 가능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동북아 지역체제의 편입을 도모해왔다. 남북러 가스관 사

62-ESPO 노선을 놓고 벌인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 대해서는 제성훈, “러시아 대 중국정책의 지정학적 지향: 2000년대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09), p. 394; 박홍영, “동북아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전망: 협력의 필요성과 갈등요인,”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한국동북아학회, 2006), pp. 303~306 참조.

63-이유진,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남·북·러가스관 사업의 현황과 해결책』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4.25), p. 5.

업의 현실화는 러시아의 극동전략의 주요한 내용을 채움과 동시에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대량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중국화를 우려하고 있다.⁶⁴ 특히, 러시아 극동의 접경지역인 동북3성 인구는 1억 명이 넘고, 러시아 극동인구는 700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지역의 주도 인구의 역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중국이 자국의 동북3성 개발 계획인 동북 진흥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나진, 청진 등을 통한 동해 진출 시도 등 ‘동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남북러 가스관 3각 협력의 확대는 러시아에게는 중국의 동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주의적 남진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었다. 가스협력을 시발로 철도(TSR-TKR 연결), 석유, 에너지 등을 통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에너지 및 물류 통합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 남진정책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의 회복이다. 당시 러시아 메르베데프 정부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담을 계획하는 등 아태 지역 진입을 본격화하고자 했다. 그 핵심은 어쩌면 북한 문제였고,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과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특히 남북러 가스관 협력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안정과 협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⁶⁴-Laurent Murawiec, “The Great Siberian War of 2030: A Report to the Director of Net Assessment,” <http://www.dod.mil/pubs/foi/International_security_affairs/china/> (검색일: 2013.7.1).

I
II
III
IV
V

기회였다.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정책이 미국, 중국 등 일방의 주도적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 포함 러시아 경제를 아태지역 경제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본다면,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 역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협력을 통해 동북아 역내 평화와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주도하고, 미·중·일 3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 등거리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외교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나. 한국의 가스관 사업에 대한 이해

(1) 지경학적 편익

한국은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 비율 97%의 수치가 상징하듯, 절대적인 에너지 빈곤국이다.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은 절대적 필요 대상이다. 한국은 안정적 가스공급과 에너지 개발을 위해 1990년대부터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편이다.

1990년대 사할린 광구의 한국 지분 참여 실패,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관 프로젝트 중단, 차얀다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유보, 2000년대 사할린-VI 광구 참여 해프닝 사건, 사할린 베닌스키 광구 탐사권 포기, 서캄차트카 유전개발권 탐사 권한 취소 등 실패사례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러시아 극동의 정유시설, LNG 플랜트·기지, 석유화학 시설 등의 사업에도 실적이 저조하며, 러시아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의 동부노선, 특히 사할린-콤포몰스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

보스토크 파이프라인과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⁶⁵ 그만큼 러시아와의 협력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러시아가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은 한국에게 새로운 호기였다.

무엇보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하게 된다면 한국의 가스 수입을 위한 물류비용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당시 러시아 LNG 수입가격이 1,000m³에 평균 413~452달러였고, 러시아가 중국에 제시하는 PNG 가격이 1,000m³에 350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남북러 가스관이 개통되면 한·러 간 PNG 가격은 현재의 LNG 수입가격보다 18~29% 정도 저렴해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PNG는 LNG와 달리 액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규모 저장시설 역시 필요 없다. 동시에 가스 소비량에 따라 공급 조절까지 가능한 기술적 편의성이 높다.⁶⁶ 또한 해상운송 비용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익을 더 챙길 수 있었다.⁶⁷

또한 가스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다양한 가스 공급 루트에 대한 개발이 적극적인 상황에 있었으며, 남북러 가스관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 가스를 재가공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도 가능했다.⁶⁸

더구나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의 실현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파급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은 남북러 가스관이 통과되면 동북아 가스에너지 허브로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가

65. 한중만 외, 『남·북·러 협력사업의 시발점: 가스관 프로젝트』, p. 44.

66. “남북러 가스관 연결 왜 필요한가?,” 『매일신문』, 2011년 8월 29일.

67. “북경유 가스관 사업 부상..정부 ‘신중 또 신중,’” 『연합뉴스』, 2011년 8월 25일.

68. “Korea Gas Plan targets China,” *Radio Free Asia*, September 5, 2011.



스 배관망의 허브로서 지역 에너지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3국 간 잉여가스분에 대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아시안 프리미엄’의 불이익 해소도 가능케 할 수 있었다.⁶⁹ 더 나아가 가스관 외에 TKR-TSR, 전력선, 광케이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되고, 임가공, 농수산업, 자원개발 등 3각 협력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새로운 지정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은 한반도 통일의 편익으로 활용 가능했다. 한국은 향후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하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북한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 및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고 향후 통일 논의가 본격화되었을 때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통일의 편익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지정학적 안보

한국에게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은 지정학적 안보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해가 있었다.

우선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러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었다. 중국의 부상 이후 갈수록 복잡해지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긴장을 억제하고 정세의 균형을 위해서는 러시아를 동북아 경제협력에 유인시켜 평화 협력의 기능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 한국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

⁶⁹ 이유진,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p. 6.

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군사적 모험을 지속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경제협력의 확대는 극동지역 개발에 북한 노동력의 유입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통과를 계기로 북한 내부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핵에 의존해 자력갱생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발전 방식에도 변화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의 확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 효과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중국의 부상 이후 핵심 당사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적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세 속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의 갈등 구도를 더욱 확대시키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남·북·러 3각 경협 확대는 각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연계시킨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I

II

III

IV

V

다. 북한의 가스관 사업에 대한 이해

(1) 지경학적 편익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대러 협력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진행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으며,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체제에 대한 위기까지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였다. 특히 산업시설에 사용할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차 북핵 위기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증유 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북한은 핵폐기의 대가로 에너지원에 대한 갈구가 심화된 상태이다.⁷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제안은 북한에게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는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우선, 가스관의 북한 통과료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 혹은 에너지(가스, 전력 등)와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만연한 자금난 및 경제 경색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주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스관 건설 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막대한 인건비 및 지역개발 수익이 발생하고, 가스관 운영 컨소시엄을 통해 건설 이후 지속적인 노동 수입까지 창출 될 수 있었다.

⁷⁰ 이윤권, “북한의 에너지수급과 러시아의 역할-동북아 질서 정착의 모색,”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0집 11월호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p. 4.

더 나아가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을 계기 삼아 북한의 경제특구, 특히 나선특구의 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 나진항 제3부두를 장기 임차하고 있었고, 러시아 하산과 나진 간 구간에 철도 현대화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가스관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러 간 경험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한국에게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금강산 관광 등의 각종 경험과 인도적 지원 등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동안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던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물꼬를 트고, 남한의 자본유입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2) 지정학적 안보

사실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이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협력의 급진전이 체제안정 유지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의 경우는 기타 국제협력 사업보다 북한의 정치체제 안정 및 지정학적 안보의 측면에서 우려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우선,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은 북한의 모기장식 개혁개방 노선에 유리했다. 즉 북한의 체제 안정을 담보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개방전략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방식은 주로 정치 수도인 평양과 거리가 먼 지역(개성, 금강산, 신의주와 황금평, 나선특구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가스관이 평양과 떨어진 노선으로 선택되기만 한다면 가스관의 체제 위협적 요소는 매우 적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I
II
III
IV
V

둘째,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 약화 및 균형을 추구할 수 있었다. 현재도 그렇지만, 중국의 부상과 남북관계의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늘 경계해왔고, ‘의존성의 균형(Balance of Dependence)’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는 냉전기부터 구소련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대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친 ‘사회주의 소국’의 생존법이였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미 그 균형이 깨졌다면, 최고 정책그룹에서는 그 균형을 복원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6월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는 등, 러시아라는 새로운 카드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새로운 행보가 나타났다. 그 결과 북한은 대 러시아 부채에 대한 이자유예 및 빗 탕감이라는 선물을 확보했고⁷¹, 전력공급, 방공망 강화를 위한 군사협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⁷²

마지막으로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은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까지 있었다. 일단 남북러 가스관이 통과된 이후, 주요 가스 소비국인 한국에 대해 가스 통과국인 북한에게 일정 정도 협상력이 제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 소결: 지경학적 편익과 지정학적 안보의 상호 윈-윈

남북러 가스관 연결 구상은 남·북·러 모두에게 지경학·지정학적으로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이었다. 위에서 논의된 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러시아는 ▲ 새로운 에너지 수출선 확보 ▲ 대중 에너지 협상 레버리

⁷¹Stephan Haggard,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More on the Pipelin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ptember 20, 2011, <<http://www.piie.com/blogs/nk/?p=2887>> (검색일: 2013.8.24).

⁷²윤성학, “남·북·러가스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p. 264.

지 확보 ▲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 발휘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지정학적 편익과 ▲ 극동전략의 내실화 및 기능주의적 남진정책의 공고화 ▲ 동북아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의 회복이라는 지정학적 편익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러시아 가스 수입을 통해 ▲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및 안정적 공급 ▲ 물류비용 절감 ▲ 남·북·러 및 동북아 경제협력의 파급효과 ▲ 통일 한반도의 주요 인프라로 활용하는 통일 편익론 등의 지정학적 편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 러시아의 균형자 역할 제고 ▲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 및 변화 유도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 등의 편익을 고려했다.

북한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통해 ▲ 심각한 에너지 난 극복 ▲ 통과료 및 노동수입 등 경제효과 창출 ▲ 남북 경협 회복 ▲ 나선특구 북한 내 해외 투자 유치 제고 등 지정학적 기대가 있었고 동시에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특징상 자신들의 ▲ 모기장식 개혁개방 노선 지속 ▲ 대중 의존도 약화 및 균형 추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남·북·러 모두에게 가스관 협력 사업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러 모두 가스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그림들이 그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스관 협력에 대한 진행은 남·러, 북·러 등 양자 간에는 진행되었지만 남북, 남·북·러 3자로 확대되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다. 결국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내부 정치의 급변화와 이어지는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 갈등의 확대 속에서 결국 ‘희망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I
II
III
IV
V

IV

남북러 가스관 중단 이후
경쟁과 갈등의 지정학



남북러 가스관은 태생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인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과 연동되어 굴러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이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어야 하며, 남북 간 경제대화 등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남북러 가스관은 태생적으로 동북아 및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한순간 결정되는 한계를 가졌던 것이다.

2011년 9월 16일 합의된 <남·북·러 PNG 사업의 장기로드맵>에 의하면 2012년 4월까지 한·러 양국은 가스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9월부터 파이프라인 부설공사를 시작, 2017년부터 공급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은 사실상 ‘계획’으로만 남아 버렸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남북러 가스관 협력은 결국 김정일의 사망, 이후 전개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기 조성 전략 등 북한리스크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가 개선 된다면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이 쉽게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게임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갈등의 기제가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에너지 협력의 이니셔티브가 작동하기 힘든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역시 한국, 러시아, 북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었는지 모르나,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치적 선택 때문에 이 협력 가능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지연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국의 에너지 이해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관련 당사국인 러

I
II
III
IV
V

시아와 북한,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및 남북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 협력의 호기를 놓친 것이 오히려 주변국 및 관련 당사국들에게 또 다른 전략적 계산을 할 여지를 주었고, 동북아 에너지 경쟁과 갈등의 지정학을 재현시키고 만 것이다.

1. 중국의 한중러 가스관 협력 제안

가. 중국의 가스 전략과 러시아 천연가스

중국은 ‘에너지 하마’로 불릴 정도로 - 경제발전에 따른 -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비국이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률이 높았으나 최근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 945억 m^3 상당의 가스를 생산했지만 가스소비는 1,100억 m^3 로 가스부족분이 155억 m^3 였다.⁷³ 2020년 중국의 가스 수요량은 3,000~4,000억 m^3 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내 가스 수요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 러시아, 그리고 미얀마에 다발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⁷⁴ 동시에 국내 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기동수(西氣東輸: 서쪽의 가스를 동쪽으로 공급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최근에는 국내

73. “Korea Gas Plan targets China,” *Radio Free Asia*, September 5, 2011.

74. 2007년 8월 총연장 188km의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2008년 6월 530km의 우즈베키스탄 구간이 시작되었고, 카자흐스탄 구간 공사는 2008년 7월 시작되어 1단계 공사가 2009년 7월 완료되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총연장 1,833km의 전체구간이 개통되었다.

인프라를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과 연결시킴으로써 천연가스 분야에서 중국의 에너지 전략 목표의 일부를 달성한 상황이다.⁷⁵ 이제 남은 것은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간 천연가스 협력은 갈등의 역사를 지속해왔으며 그 성과가 매우 미약했다.⁷⁶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러 석유 협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견제를 경험한 바가 있으며,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 역시 러시아의 전통적 대중 견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러 간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1996년에 합의된 서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3,000km의 가스관(일명 알타이노선)과 그리고 2003년까지 추진되다 좌초된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두 가지였다.⁷⁷ 알타이 노선은 오랜 기간 진전이 없었고, 한국까지 참여한 코빅타 가스전 계획은 러시아에 의해 무산된 이후 사할린 가스전을 한국, 일본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이

75. 중국의 서기동수 프로젝트 1기는 신장의 룬난(輪南)에서 상하이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000km의 가스파이프라인(2002년 건설 2005년 공급, 연간 120억m³)으로 카자흐스탄-중국 가스라인과 연결 예정이다. 서기동수 2기는 신장의 휘얼귀쓰(霍爾果斯)-닝샤(寧夏中衛)-광저우까지 총연장 9,102km (2008년 건설, 2011년 개통, 연간 300억m³: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라인과 연결) 3기는 신장에서 중국의 푸젠지역으로 4기는 타림분지나 스촨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가스협력도 진척이 잘 되고 있는 중이다. “西气東輸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15106.htm>> (검색일: 2013.8.2).

76. 김연규, “중국 러시아 편위의 에너지 동맹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녹색의 국제정치학: 핵·에너지·환경』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년 학술회의, 2011.4), pp. 66~67; 중·러 양국 간 천연가스 협력과 갈등에 대해서는 陳菁泉·云曙明, “中俄天然氣合作博奕與發展趨勢研究,” 『俄羅斯中亞東歐研究』 2011年 6期를 참조할 것.

77. 위의 글, p. 66; 주재우, “중·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석유관과 가스관을 중심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갈등, 중국일본 자원외교와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인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5.9), p. 2.

I
II
III
IV
V

는 러시아의 동부가스프로그램 전략 차원이기는 하지만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일본(중국 견제), 러시아의 전통적 대중 견제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중국은 최대의 가스 소비·수입 시장이었다. 공급가격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일 수는 있어도 중국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고객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2008년 10월 지난했던 중·러 에너지 협력을 위한 줄다리기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양국은 무려 15년의 걸친 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대중국 원유 공급에 대한 협정(Raw Oil Pipeline Construction and Raw Oil Supply for China)을 체결했다. 동시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대 중국 원유공급(Natural Gas Pipeline Construction and Natural Gas Supply for China)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는 2015년에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09년 6월 러시아 가즈프롬과 중국의 CNPC가 실무적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쪽 공급 루트(서시베리아-노보시비르스크-신장 서기동수, 총 연장 2,600km): 2015년 가스 공급 계획, 30년, 연간 300억³(현재 지연 중)
- 동쪽 공급 루트(동시베리아, 극동 및 사할린): 미정,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코빅타와 사할린, 야쿠츠크 차안다 가스전 위주

그림 IV-1 중국 서기동수 노선도



그림 IV-2 중·러 가스관 동선과 서선



I
II
III
IV
V

그러나 여전히 공급가격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최소한의 가스가격을 1,000m³당 350달러로 제시한 반면, 중국은 유럽 공급 가격보다 낮은 수준(235\$)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⁷⁸

나. 중국의 새로운 제안: 북한을 배제한 한중러 가스관 협력

중국은 김정일이 사망 전 추진했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마도 중국 의존도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러시아를 새로운 후원국으로 끌어들이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관련 행보를 적극 환영하고 부채까지 탕감해 주면서 가스관 협력에 적극성을 띄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속내는 매우 불편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북한 나진항 선점 및 대북 경제협력에 있어 주도권을 쥐면서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지경학적 편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확대는 결코 반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안보 측면의 고려 외에도 당장 안정적 가스 공급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남북러 가스관이 연결되면 러시아 가스자원에 대한 물량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으로 공급될 가스

⁷⁸ 2013년 3월 22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가즈프롬과 CNPC가 가스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하고, 가스가격은 연내 타결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러시아 가스의 중국 공급 노선의 주요 방향을 이른바 ‘동선’으로 합의한 것이다. 물론, 가격협상이 급세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지난 10년간 난항을 겪은 양국 간 가스 협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엄구호,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 가스와 동북아 가스 경쟁,” (Online Journal Russia·CIS FOCUS 221호, 2013.6.24) 참조.

는 사할린 광구와 2016년 완공되는 야쿠츠크(차안다 가스전)-하바로 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연결과 연관이 깊었는데, 이는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선점 전략과 중복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러시아와 기 합의한 가스 협력 외에도 러시아 가스에 대한 경쟁적 우위 확보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남북러 가스관이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가스 수급 차원에서 중국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동북아 천연가스 공급의 허브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선 중국은 헤이룽장성(다칭)을 중심으로 에너지 플랜트 거점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2011년 말부터 내수용 가스 가격의 시장경쟁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종목표는 상하이에 천연가스 현물 거래 시장을 설립하고, 현재의 가스 공급자 위주의 가격 주도권을 동북아 수요국들 위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라면 러시아로 출발하는 천연가스 라인은 중국으로 집중되어야만 중국의 계산과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중국의 속내는 남북러 가스관 협력이 지지부진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대체 노선으로 러시아-중국(산둥반도)-서해 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이 노선의 종착점인 웨이하이에서 백령도까지는 174km이며, 서울까지는 380km로 남북러 가스관 노선의 북한 통과거리 700km보다 짧다.⁷⁹⁾

I
II
III
IV
V

79. “한·러 가스관, 북한 빼고 中 파격 제안,” 『중앙일보』, 2012년 3월 23일.

그림 IV-3 중국 제안 한중러 가스관 노선⁸⁰



이 제안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장제민(蔣洁敏) 회장이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사장과와의 면담(2011년 8월)에서 나온 것인데, 기업총수이지만 장 회장이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200위권에 드는 당 중앙 후보위원이고 중국의 1위 에너지기업인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책임 수장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전략이 일정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¹ 장 전회장은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 대형 국유기업을 총괄하는 국유자산감독위 주임(장관급)에 발탁되었고, 최근에도 이 서해노선에 대해 재확인한 바가 있다.⁸² 더구나 중국 제안 노선은

80. CNPC, 중앙일보 2012년 3월 23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81.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 가스관,” 『중앙일보』, 2013년 3월 29일 기사 참조.

82. “중·러의 한반도 천연가스관 게임,” 『중앙일보』, 2013년 5월 11일.

향후 중·러 가스 협력의 주요 노선이 될 ‘동선’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북아 천연가스 허브 전략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이 남북러 가스관 추진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러시아의 입장 변화 가능성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한때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준 러시아는 그 시간 동안 입장의 변화가 없을까? 다시 말해서 남북러 가스관은 러시아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공급 확대는 이미 확정된 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점이다.

첫째, 한국과 러시아는 수요 및 공급자로서의 갈등관계에 있다. 러시아는 공급국으로 국력과 자원, 북한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변국과 가스 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선택의 옵션이 있다. 이 관계의 구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서는 무섭고 치명적이다. 한국에게 남북러 가스관은 절실하고 필연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에게는 그만큼의 절실함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옵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I
II
III
IV
V

표 IV-1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관계 비교⁸³

요소	한국(수요)	러시아(공급)
국력	상대적 약	상대적 강
자원	빈국	부국
통과지(북한)와의 관계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	상대적 양호
자원에 대한 주변국(중,일)과의 관계	경쟁	선택(대안들)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 2000년대 초반 ESPO 송유관 노선 결정과 비슷하게 자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가스 소비국 경쟁구도를 선호하고 있다. 러시아는 당시 중국과 일본에게 각각 유리한 노선을 제시하고 경쟁을 유도한 것처럼, 남북러 가스관 논의가 한창일 때에도 한국에게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일본에게는 블라디보스토크 LNG 사업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을 유도했었다. 이처럼 러시아에게 남북러 가스관은 하나의 카드에 불과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 입장에서 남북러 가스관의 효용가치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북한리스크가 크고 한국 자본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남·북·러 PNG 사업에 부정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통과 가스의 안정성 확보 문제는 이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으며 사실상 가스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⁸⁴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파탄 시도까지 북한의 불확실성이 명약관화해진 마당에, 러시아 입장에서조차 북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적극적 관여 동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⁸³ 출처: 한중만 외, 『남·북·러 협력사업의 시발점: 가스관 프로젝트』, p. 88.

⁸⁴ 김남일,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2011 민화협 화해공영포럼, 2011.11.15), p. 62.

셋째, 러시아의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이해관계의 변화이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당시에 러시아는 2012년부터 사할린-Ⅱ 광구 물량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공급하면서 향후 수출 라인을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었다. 더 이상 노선 선택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에 적극성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 또한 PNG보다 건설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드는 LNG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⁸⁵ 그러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2012년 10월 러시아 가즈프롬과 일본의 에너지기업 컨소시엄 사이에 LNG 사업 협약이 본격화되었고, 북한리스크 등으로 인해 남·북·러 PNG 사업의 조기 재개가 희망이 없다고 판단, LNG 액화기지 건설을 확정하게 된다면 굳이 PNG 사업을 재개할 이유는 러시아에게 없어진다.⁸⁶ 이러한 우려는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자체가 정치적인 특징이 강하고 북한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가즈프롬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⁸⁷

물론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이 동북아 주요 가스 소비국들 간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러 PNG 사업과 일본을 겨냥한 블라디보스토크 LNG 사업은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조기 구체화 작업이 실패하고, 러시아가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러시아는 현실적 대안으로 일본 측 사업을 우선 진행할 가능

⁸⁵ 윤성학, “남북러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p. 263.

⁸⁶ 러시아는 2012년 10월 29일 약 450억 달러를 투입해 동부 시베리아 가스 노선(야쿠츠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3,200km의 가스관과 액화설비를 건설해 LNG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Reuters*, October 29, 2012.

⁸⁷ “통일연구원 비공개회의-러시아측발언,” (통일연구원 비공개회의, 2013.3.25).



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러시아와의 투자 관련 협상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⁸⁸

넷째, 가스 시장 판도에 따른 러시아의 전략 변화이다. 셰일가스 개발 붐에 따라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국 등 다양한 공급국들이 등장하면서 최대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PNG 시장에서 부동의 수출 1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이지만, LNG 분야에 있어서는 약자에 불과하다. 더구나 셰일가스 개발 및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가격 인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윤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LNG 수출에 적극적 전략을 펼 동기가 강화되었다.⁸⁹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접근 가능성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 증거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자 1994~2002년 동안 러시아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가스의 중국·한국 우선 공급 방안은 2003년부터 사할린 가스의 일본·한국 우선 공급·개발 방안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선회 전략은 가스 공급에 있어서 대중 견제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 공급 노선이 결국 중국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전략 역시 중국에게 우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에 있어 동아시아 수출 확대는 기정

⁸⁸.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서 기 계획된 가스 공급량이 약 750만 톤에 비해 블라디보스토크 LNG 설비 용량은 1000만 톤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2017년에 양쪽 모두에게 가스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 윤익중,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갈등: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 여건과 남·북·러 PNG 사업,”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갈등, 중국일본 자원외교와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인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5.9), p. 2.

⁸⁹. 이에 대해서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 아시아 천연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2013년 1월 9일 기사를 참조.

사실이며, 이 수출 시장의 중주국은 명실상부하게 중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직까지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막대한 소비시장은 러시아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남북러 가스관 협력을 적극 추진했던 것도 지정학·지경학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가스협상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의 시장과 자본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러시아의 시각에서 일·러, 한·러 관계는 중·러 관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버리지(수단)라고까지 할 수 있다.⁹⁰

그러나 중국은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등장으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갈증이 반감된 상황이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에너지 수급선 다변화 전략을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적이지 않다. 러시아가 대중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노선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중국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이 수단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판매자인 러시아가 중요한 고객인 중국에게 양보 혹은 투항하게 되는 형국인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더구나 미국의 ‘아시아 회귀’라는 동북아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의 강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협력의 진전이 촉진될 개연성이 있다. 1990년대 러시아가 일본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에너지 개발 관련 러브콜을 물리치고 중국에 파격적인 원유 및

⁹⁰-Stephen Blank, “Partnership of Convenience: Understanding Russo-Chinese Relations,” June 2009, <<http://www.criticalthreats.org/russia/>> (검색일: 2013.7.20); Robert Culter, “Russo-Chinese Energy Ties Structure Strategic Cooperation,” October 28, 2010, <<http://www.isn.ethz.ch/Digital-Library/>> (검색일: 2013.7.20).

I
II
III
IV
V

천연가스 공급을 약속한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전개하는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중·러 대응전선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었다.⁹¹ 미국의 ‘아시아 회귀’ 및 미·일 동맹 강화 등 동북아 국제질서의 급변화 속에서 1990년대 체제로의 회귀가 러시아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3. 일본 변수의 확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일본은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 공급 원으로 석유 및 LNG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LNG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공급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사할린 주변 가스전 개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⁹²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일본은 복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남북러 가스관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천연가스 공급 루트 다변화와 대중국 견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러 가스관은 오히려 한중러 가스관사업보다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선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슈라는 측면은 첫 번째, 일본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보다 극동·동시베리아 개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극동·동시베리아 개발협력과 무관한 사안이고, 그 이유는 극동·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비 수단의 의

91. 김연규, “중국·러시아 편익의 에너지 동맹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p. 61.

92. 藤山光雄, “LNG火力の燃料調達コスト抑制に向けた課題,” *Business & Economic Review* (September 2012), p. 22.

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구 소련에 대한 ‘정경불가분의 원칙’에서 탈피하여,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⁹³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13년 4월 리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자원·에너지 분야와 농업, 의료, 인프라 수출 등 경제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쿠릴 열도 문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된 것이라고 보이며, 그 수단으로 러시아와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이 일본 경제 재생의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2012년 자민당 아베 내각 등장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의 경제연대 강화를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연계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⁹⁴ 특히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인프라 정비, 농업, 의료기술 협력 확대 등 투자 확대 정책은 일본재흥전략의 하나인 ‘국제전개플랜’의 핵심 내용이다.⁹⁵ 또한 러시아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은행(JBIC)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첨단의료기술, 자원개발

⁹³ Rajan Menon, “Russo-Japanese Relations: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Security,” Stephen J. Blank and Alvin Z. Rubinstein (eds.), *Imperial Decline Russia’s Changing Role in As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⁹⁴ 『毎日新聞』, 2013년 4월 29일자 기사 참조.

⁹⁵ 首相官邸,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 (검색일: 2013.7.20)

I
II
III
IV
V

확대를 위해 1천억 엔 규모의 용자와 출자를 상정하고 있다.⁹⁶ 이 점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연대를 강화하여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적·정치적 실익의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는 일본에게 있어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루트 확보와 중국 견제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가 한중러 가스관 프로젝트 보다 선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일본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루트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라는 차원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개발과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할린 지역 해상유전은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에 있어 개발 효율성이 큰 지역으로 일본으로서는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중국이나 다른 다국적 기업에 비해 진출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개발협력은 사할린-I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다. 사할린-I의 경우 총 매장량 4,850억³m³로 미국 엑손모빌 사가 주관(지분 30%)하여 2005년 10월부터 석유와 가스 채굴이 시작 되었다. 일본은 13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할린석유가스개발주식회사(SODECO)가 30%, 인도 국영석유사(ONGC), 러시아 로스네프트(Rosneft)사가 각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할린-II 프로젝트의 경우는 총매장량 4,000억³m³로 러시아 가즈프롬이 50%+1, 로열 도취/셸 27.5%, 일본 미쓰이 물산 12.5%, 미쓰비시 상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량의 60%가 일본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전체 LNG 소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96. 『朝日新聞』, 2013년 4월 30일자 기사 참조.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루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사할린지역에서 생산되는 LNG를 일본 본토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에서 해상수송을 통해 LNG를 공급받고 있다. 이 점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공급 루트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에 실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중·러 접근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다.⁹⁷ 일본과 중국은 러시아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 집단(CNPC)은 오는 2018년까지 러시아 국영 정유회사 로스네프트로부터 일일 최소 74만 3,000배럴의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러시아 가스수출업체 가즈프롬은 중국과 가격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018년까지 380억m³ 규모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특히, 2013년 중러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이 러시아 동부의 석탄자원개발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는 대중국 석유 수출을 3배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푸틴과 시진핑 두 정상 간 합의된 사항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이 로스네프트에 차관을 제공하고 장기간 석유를 공급받게 됨으로써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 석유의 제1수입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중국이 러시아산 최대 석유수입국이 된다는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중국에게 상류개발 부문을 개방해 단순히 자원 공급에 그치지 않고, 특히 북극 지역에서의 개발을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과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⁹⁸

97. 『日本經濟新聞』, 2013년 3월 23일자 기사 참조.

98. 『에너지경제신문』, 2013년 4월 24일자 기사 참조.

I
II
III
IV
V

이에 일본은 ‘중국 위협론’이라는 입장을 견지,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견제를 통한 에너지 확보의 측면에서 한중러 가스관 프로젝트 보다는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남북러 가스관 문제에 있어 ‘시간은 늘 우리 편’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중국 제안 노선 보다 남북러 가스관 노선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러 협력 강화를 통해 일·러 간 영토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고 사할린과 일본 북부 파이프라인 연결 시도를 구체화한다면, 우리의 남북러 가스관 건설 추진은 상당기간 지체되고 실질적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제 러시아 가스의 해외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프롬 내부에서 일·러간 가스 파이프라인을 우선적 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⁹ 일·러 협력이 확대된다면 천연가스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 경우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두고 벌이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됨으로써 한국의 산업경쟁력에 심각한 도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남북러 가스관의 추진 동력 역시 상실할 가능성과 함께 말이다.

⁹⁹ 김석환, “남북러 가스관 관련 정책제언,”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평화협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9.25).

4. 남남갈등과 미국의 부정적 입장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무르익었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았다. 회의론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 리스크였다. 북한을 경유하는 PNG 노선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통과 리스크로, 가스관 건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개성공단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설득력은 더욱 증가했다. 두 번째는 북한 군부의 반발과 통과 이익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이다. 가스관이 북한의 군사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데 북한 군부가 이를 허용할 리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이 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각종 공사수익 및 통과 수수료가 북한 일부 엘리트나 군부에 통치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있다. 셋째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3차 핵실험까지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 자체가 과연 타당한 구상인가라는 협력 대상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이다.¹⁰⁰

반면 북한리스크를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온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사업은 북한 입장에서든 이익이 되던 되던지, 크게 손해 볼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 등 국제 컨소시엄이 건설한 가스관을 함부로 공급 중단시키거나 가스를 절취하는 무모한 행동을 북한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사업이 남북만의 경험이 아닌 국제적 경험이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¹⁰⁰-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홍우택,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의 썬 방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1-23, 2011.9.6); 이윤식,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pp. 55~62를 참조할 것.

I
II
III
IV
V

이들의 주장은 일단 가스관이 건설만 되면 북한리스크는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 없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진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한국 내에서도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갈등이 쉽게 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러시아 가스관의 중국 통과 노선을 수용하는 주장과 가스관은 북한을 거쳐야만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야만 한다는 주장은 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여,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 견제, 동북아 세력균형 차원에서 러시아 활용, 북한리스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다.¹⁰¹ 반면, 남북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리스크까지 있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국경유 노선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자는 주장들이 맞서고 있다. 이 주장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루트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단 중국 경유 노선을 통해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의 허브 구상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차선적으로 북한리스크를 제거해 가면서 남북러 가스관 노선을 검토하자는 내용이다.¹⁰²

한국 내의 입장차이 외에도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이해이다.¹⁰³ 미국은 세계 송유관, 가스관 분야에

101. “가스관이 북한 거쳐야 할 이유,” 『중앙일보』, 2012년 7월 3일 기사 참조.

102. “러시아 가스관, 중국 거쳐 오면,” 『중앙일보』, 2012년 4월 4일 기사 참조.

103.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가스관 내륙 관통보다는 나진항을 이용한 LNG 공급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한국을 배제하고 러시아와의 협상만으로 가능하며, 나진항까지 PNG 가스관을 연결하고 나진항 근처에 LNG 생산을 위한 액화단지를 조정한 후 항만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하는 러시아의 정치적 동기를 일정정도 만족시키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서 독보적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기업들 역시 미국계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가스관 연결사업을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에서 보다는 지정학적, 국내외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을 해왔다.

원래 미국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급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첫째, 북핵문제와의 연동성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폐기라는 뚜렷한 성과 없이 북한에게 이득이 가는 가스관 프로젝트가 반가울 리 없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코빅타 프로젝트 무산 이후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해 사할린- I 광구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경로를 희망해왔지만,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와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엑손 모빌은 북한에 혜택이 돌아갈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¹⁰⁴

둘째,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있어 균형 상실이 우려된다. 북한과 러시아 간 가스관 연결은 미국의 지정학 전략에 있어 문제가 크지 않지만, 한국이 포함되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동맹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냉전시기 미국이 소련과 유럽 간의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을 극구 반대한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셋째,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잠재적 경쟁국인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에너지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수출전략 확대는 전체 국가 수입의 60%를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경제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남북러 가스관보다는 적지만 일정정도의 가스 통과료와 노동임금을 챙길 수 있고, 더구나 기존의 모기장식 개혁개방 전략과도 맞아 떨어진다. “간단하지 않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의 정치학,” 『민중의소리』, 2011년 8월 26일.

¹⁰⁴ “미국이 꺼리는 사할린 프로젝트,” 『한겨레』, 2004년 10월 11일.

I
II
III
IV
V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는 배치된다.¹⁰⁵ 미국이 남북러 가스관을 달가워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이다.

넷째,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인해 LNG의 아시아 지역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셰일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며, 한·중·일 등 아시아의 가스 대소비국의 LNG 수입선이 안정·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⁶ 미국의 LNG는 도입가격이 중동산 LNG처럼 유가에 연동되지 않고, 미국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자원임은 틀림없다. 이 때문에 한·중·일 3국은 북미지역의 LNG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 예상된다.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도 미국과 LNG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당연 자국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한국-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¹⁰⁷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 이익과의 연관성이다.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의 안보 전략은 대중 견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유리한 에너지 협력 구도의 전개는 향후 중국의 팽창을 추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차원에서 일본이 전개하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강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¹⁰⁵-김성훈, “셰일가스 경제효과 부풀린 미국의 속내,” <<http://urisociety.kr/sub.php?board=C1&id=310>> (검색일: 2013.7.20).

¹⁰⁶-2011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6.4tcf(trillion cubic feet)로 천연가스 총생산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비중은 2035년에 약 50%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¹⁰⁷-2012년 1월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의 Sabin Pass LNG와 2017년부터 20년 동안 연간 약 350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윤익중,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갈등: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 여건과 러·남·북 PNG 사업,” p. 3.

일본과 러시아가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전격적으로 정례화하기로 결정하고,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에 있어 협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안보전략의 이해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북한리스크가 포함된 남북러 가스관 보다는 자국의 안보 이해에 유리한 러·일 간 가스 협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I

II

III

IV

V

V

남북러 가스관의 의미와 역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



1.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촉진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의 중심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의 아킬레스 건(Achilles' heel)은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러한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은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기본 구도라 할 수 있다. 즉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구도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새로운 협력이 시도되었지만, 북한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협력의 이니셔티브 추진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북러 가스관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의 성공적 추진에 방해가 될 전통적 갈등의 에너지 지정학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국 주도의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라는 거시적 배경도 우리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부의 입장 조율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I
II
III
IV
V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북러 가스관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장에서는 동북아의 에너지 지정학 구도 속에서 남북러 가스관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주변국들의 새로운 제안 등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 속에서도 왜 남북러 가스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

현재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사실상 공급자 과점시장으로서 소비자 간의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역내 에너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 역내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단일한 내부에너지 시장(IEM)을 추진하고 있는 EU,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활용하여 역내 전체를 연결하는 횡단 가스관(TAG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ASEAN)의 에너지 협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¹⁰⁸ 반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북아에서는 높은 에너지 역외 의존도, 에너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역내 다자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동북아 국가들은 아시안 프리미엄이라는 핸디캡도 안고 있다.¹⁰⁹

하지만 동북아는 역내 다자 에너지 협력에 유리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¹¹⁰ 첫째, 수요국과 공급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가스관과 같은 확실한 장기적 공급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가 새로운 에너지 수출시장으로 동북아를 주목하면서 극동·시베리아 에너지자원

108. EU, ASEAN의 에너지 협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형국·백훈, “다자주의 에너지협력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참조

109. 보다 자세한 설명은 2장 참조.

110. 박홍영 “동북아 에너지문제의 현황과 전망: 협력의 필요성과 갈등요인”에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수요와 공급원의 지리적 근접성, 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대,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공급 다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개발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더욱 고무적인 현상이다. 둘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셋째, 동북아 3개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동 대응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러시아 가스가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현재 공급이 많지 않은 국제 가스 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다변화 차원에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¹¹¹ 넷째, 특히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공급 및 소비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조화요건(Harmonization Requirements) 면에서도 시장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¹¹² 여기서 시장 통합이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조화를 바탕으로 양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하나의 시장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¹¹³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동북아 3국은 협력을 통해 최소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연대를 통한 협상력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 연결되는 에너지 공급망 통합, 공동 에너지 시장 건설 등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가스관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또 하나의 경쟁수단이 아니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 가스의 PNG 형태 수입을 위한 가스관 건설을 협상 중이

¹¹¹ 이성규, “남·북·러 PNG 사업추진과 대응방향,” 『남·북·러 PNG 사업추진과 대응방향, 그리고 가스관에 대한 일본의 입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9.3) 참조.

¹¹² 백훈, “동북아 에너지협력체를 위한 유럽연합의 교훈,” 『산업경영연구』, 제13권 1호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 2004), p. 60.

¹¹³ 橋本道雄, “日韓エネルギー市場統合: その可能性と効果,” 『산업경영연구』, 제12권 1호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 2004); 김형국·백훈, “에너지협력제도 구상: 동북아와 유럽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제37집 (한국동북아학회, 2005), p. 452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며, 일본 역시 LNG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가스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러시아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자 남북러 가스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중·일 3국 모두가 러시아 가스를 장기적으로 공급받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므로 공급 안정성 확보 및 가격 인하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건설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유리한 또 하나의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어느 한 국가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반면, 남북러 가스관 건설로 역내 모든 국가가 안정적인 공급 루트를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다자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첫째, ‘독점공급과 경쟁적 수요과점’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협력적 수요과점’을 형성하여¹¹⁴ 장기적으로 물량 확보 및 가격 결정과 관련된 대러 에너지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 유럽 에너지 기업들은 셰일가스의 부상과 관련하여 기존 장기공급계약을 수정하여 가스 가격을 할인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다수의 국가가 러시아 PNG를 공급 받으면서 시장이 커졌고 이로 인해 수요자-공급자 간 일정한 힘의 균형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계기로 다자 에너지 협력이 실현되면 에너지 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에 대해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러 가스관 실현을 통한 다자 에너지 협력(일종의 동북아 가스 벨트)은 구성원 상호 간의 우회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

¹¹⁴ 주성규,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3권 1호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 pp. 134~135.

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가 일정 국가에게 가스 공급을 무기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¹¹⁵

둘째, 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 가운데 일부를 LNG 형태로 각국의 계절적, 시기적 수요에 맞게 거래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거래는 비상시 스왑체제 구축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적어도 현재 각국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가스 비축시설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이 가스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공동으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아세안(ASEAN)의 에너지 협력 형태와 유사한 동북아 가스관 연계 프로젝트도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¹⁶

이러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러시아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것은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동북아 에너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되면 러시아에게는 거대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된다. 아직은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로 볼 때 동북아지역이 그에 못지않은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정부와 가스프롬은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가스 가격인하 요구, 유럽의 가스 수요 감소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시장의 확대와 인프라 확충은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¹¹⁵. 2010년 루마니아와 몰도바 사이에 추진된 50km의 대체 가스관, 이른바 웅겐-야쉬(Ungheni-Iași) 노선은 러시아에 대한 몰도바의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Chang Bae Hur, "A Study on the Reunification between Romania and Moldova within the EU," (M.A.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2), pp. 131~133을 참조.

¹¹⁶. 이와 관련 이윤효 박사도 동북아 국가들의 가스관 망을 연계하는 '동북아 가스벨트' 건설을 통해 잉여 가스 거래를 활성화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물론,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윤효,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참조.



남북러 가스관은 또한 한국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주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11월 UNESCAP 주관으로 올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차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위원회 회의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는 등 역내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 일본에 비해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서 뒤처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러 가스관을 건설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와 LNG 장기공급계약도 확보한다면, 역내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러 가스관이 관통하게 될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PNG와 LNG를 동시에 수입하는 국가로서 동북아 시장의 확대, 잉여물량 거래 및 스왑체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가스 공급 인프라 및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 확보만 가능하다면 동북아의 에너지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비교적 잘 정비된 전국적인 가스 배관망과 LNG 운송에 적합한 항만시설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에너지 시장이지만 배관망이 아직 제한적이다. 일본은 빈번한 지진과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스 배관망이 분산적이며, 사할린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계획 역시 지진에 대한 우려, 어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구상단계에 머물러있다.¹¹⁷

다음으로 한국은 LNG 방식, 즉 액화처리 및 수송기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박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¹¹⁷ 윤석상,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일본의 입장,” 『남·북·러 PNG 사업추진과 대응방향,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일본의 입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9.3).

경우에는 주로 가스관 공급 중심의 PNG 방식의 기술만 발전해있고, LNG 방식 기술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한 중국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하류부문, 즉 가공처리, 비축 등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역내 에너지 협력에서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시장 통합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¹¹⁸ 양국은 아시아 LNG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일 뿐만 아니라 대외의존도도 높으며, 에너지 소비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이 건설될 경우 일본과의 에너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은 주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PNG를 공급받을 것이고,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 건설로 LNG를 공급받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잉여 물량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러 협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협력의 경험은 공급국인 러시아, 그리고 소비국인 중국, 북한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다.

¹¹⁸ 백훈,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시장통합: 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13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6), pp. 145~149.

2. 에너지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의 기폭제

탈냉전기 동북아는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상호의존 심화를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 중 하나가 되었지만, 에너지자원의 한계성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구화의 도전과 역내 국가들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은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동북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한편 지경학적 차원의 긴밀한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역내 국가들 간의 대립과 갈등, 그것의 잠재적 원천들로 인해 전략적 차원에서 ‘불안정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의 장이 되고 있다. 한반도와 양안(兩岸)의 오랜 대치상황, 역내 국가들 간의 영토논쟁,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군비경쟁 가속화, 이른바 과거사 및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 등은 동북아의 전략적 긴장을 수시로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고, 현재 전략적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서도 지정학적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즉 중국이 더 이상 러시아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의 변화된 지정학적 구도에 적응하거나 혹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의 중·러 양국 관계는 ‘편의의 축(Axis of Convenience)’¹¹⁹으로 명명할 수 있다.¹²⁰

119. Bobo Lo에 따르면 러·중관계는 상호 ‘편의의 축(Axis of Convenience)’에 불과하다. 중국은 러시아를 단순히 석유, 목재, 군사기술의 핵심 원천으로만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적 균형추이자, 자국의 영향력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지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뢰의 폭과 깊이를 고려할 때 양국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아니라 ‘제한적 동반자관계’라고 주장하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의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하고, 이를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 및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먼저 테러·마약, 에너지·물류·환경, 인도주의·재난대응 등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시작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의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¹²¹

이러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협력, 특히 동북아 긴장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협력 기제로서 유럽 열강들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오늘날 유럽연합의 모태가 된 것은 에너지 협력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였다. 1950년 5월 프랑스의 외무장관 슈만(Robert Schuman)은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철강 산업을 초국가적 기구 아래 통합하기 위한 회의 개최와 이러한 초국가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이른바 ‘슈만플랜’을 발표하였다. ‘슈만플랜’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양국의) 석탄과 철강 산업의 통합은… 오랫동안 전쟁물자 생

면서, 러시아 극동 발전의 불확실성,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중앙아시아에서의 대결구도, 경쟁적인 동아시아 전략구상, 세계와 동북아에서 양국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등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Bobo Lo,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London: Chatham House, 2008) 참조.

¹²⁰ 제성훈, “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 정책기조, 변화의 원인, 수행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1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2), p. 48.

¹²¹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 p. 197.

산에 사용되었던 이 지역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 이제 탄생할 생산의 연대(Solidarité de Production)는 프랑스와 독일의 장차 모든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¹²²이다. 따라서 1952년 7월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단순한 에너지 협력이 아니라 당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범유럽적, 초국가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지향했다. 또한, 이는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수백 년간 갈등과 분쟁을 거듭해 온 유럽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었다.

에너지자원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협력은 비정치적이면서 정치적인 협력이며, 비전통적 안보이슈이면서 동시에 전통적 안보이슈이다. 유럽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에너지 협력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협력을 담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역내 일부 국가들 간 협력의 경험이 지역적 차원의 협력으로, 구체적 협력의 경험이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역시 역내 국가들이 타협하기 용이한 영역에서 협력의 습관을 축적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신뢰가 구축되고, 이러한 신뢰는 보다 타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¹²³ 따라서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협력인 남북러 가스관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기폭제(起爆濟)의 역할을 할 수 있다.

¹²²-Géard Bossuat, *Les fondateurs de l'Europe* (Paris: Belin, 1994), p. 162;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 (슈만 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프랑스사 연구』, 6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02), p. 47.

¹²³-박재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최진욱 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71.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동북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남북 간 불신과 대립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¹²⁴ 또한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차원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¹²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을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계획이다.¹²⁶ 남북러 가스관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물적 토대가 되는 남북 통합 에너지 인프라로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의 경제적 수단이 될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의 정치적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동북아,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이른바 ‘북한 요인’인데,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사

¹²⁴ Park Geun-hye, “A Plan for Peace in North Asia: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needs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12, 2013.

¹²⁵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설명』, <http://www.trustprocess.kr/sub/learn_text.asp> (검색일: 2013.10.1).

¹²⁶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8).

I
II
III
IV
V

실이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 중국의 영향력 행사, 한국의 대북 유화 또는 강경정책, 6자회담, 유엔안보리 제재 등 어느 하나도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리스크로 인해 남북러 가스관 건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막상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자신에게는 통과료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주는 이 가스관을 북한이 쉽게 위기에 빠트리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가스관 차단에 대비하여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LNG 대체물량을 보장 받는다면, 북한이 가스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오히려 가스관 차단은 자신은 물론, 중국 다음으로 우호관계가 두터운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간의 우려와 달리 남북러 가스관은 ‘북한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남북러 가스관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경제적 수단이면서 동시에 ‘북한요인’을 관리하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스관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2012년 10월 23일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재단이 주최한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의 일부로서 한러 협력’ 세미나에서 콘스탄틴 시모노프(Konstantin Simonov) 국가에너지안보재단 이사장은 “가스관 건설 사업이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⁷ 또한 글렐 이바센초프(Gleb Ivashentsov) APEC 연구센터 부소장(전 주한 러시아 대사)은 “북한 경우 가스관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이 한반도 정세 안정화

¹²⁷. “러, 북가스관 차단시 LNG 한국에 대체 공급,” 『연합뉴스』, 2012년 10월 24일.

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동서 냉전 시절인 1960~70년대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가스관을 건설하고 난 뒤 서방과 소련 간에 상호 신뢰 분위기가 조성된 전례가 있다”며 “에너지 분야 협력이 정치적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²⁸

현재 북한은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중국 등 일부 국가들과 제한적인 경제협력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는데, 남북러 가스관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역내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 보류되었던 대규모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철도 연결, 전력망 연계)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역내 경제협력 참여, 즉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대외경제협력 패턴 변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를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적 차원, 그리고 유럽에서는 미국과 대등하게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강대국이지만,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지위와 역할을 가진 중견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인해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가 두 개의 트라이앵글(한·미·일, 북·중·러) 간 대립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데,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을 계기로 한 3자

¹²⁸ 위의 글.

I
II
III
IV
V

협력은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통한 러시아와의 중축 협력은 미·중 간 횡축 압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을 자연스럽게 동북아 지역통합에 포함시켜 역내 안보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²⁹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3자 협력으로 자신의 국가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중견국 외교를 통해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다자간 상호 협력의 틀로 완화하려는 한국에게 고무적인 일이다. 6자회담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는 브레즈네프 시절부터 유럽안보협력회의(OSCE)와 유사한 동북아판 역내 다자안보 메커니즘 창설을 주장해왔다.¹³⁰ 러시아의 이러한 구상은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건설은 ‘상시포위심리’¹³¹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라는 기존의 정책적 지향에서 벗어나 한국,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을 시도하게 되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립구도는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내 국가들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협력의 기회마저 무산된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비전통적 안보이슈이며, 동시에 다자경제협력의 매개가 되는 남북러 가스관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29. 김석환,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구상,”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7.17) 참조.

130. 계성훈,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 중국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p. 164.

131. 샬리그 해리슨, 『코리아안 엔드게임』 (서울: 삼인, 2003) 참조.

의 기폭제로서 어제, 그리고 오늘과 다른, 동북아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3. 정책적 고려사항

가.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 현실에 대한 직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서의 인프라 구축이나 지분 참여 등의 투자, 협력 매커니즘 참여 등 러시아와의 에너지·경제 협력에서 한국이 다소 뒤처져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송유관과 가스관 사업은 물론,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일본 역시 사할린 가스전 개발 등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할 경제·산업적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전력망 구축 사업 등에서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1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 항만개발 및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고무적이나,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에너지 협력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개별 국가들 간의 양자협력 강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러시아가 일본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문제 등 현안을 긴밀히 논

I
II
III
IV
V

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일 간의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러 간 정치·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협력까지 구체화되면 에너지 상류 부문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의 장기적 비전 전략의 차원에서 러·일, 중·러 간 협력의 확대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재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종합적 인식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연계

남북러 가스관은 정치경제적, 군사안보적 차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차원에서도 한국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북한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인식은 안보나 경제 논리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중해서 접근한 경향이 강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이렇게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동북아 경제통합뿐 아니라 군사안보 차원, 동북아 국제질서의 지정학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의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을 과소평가하면서 과잉 안보 불안증으로 대처할 경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냉전의 종식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만들어준 기회임과 동시에, 한국 외교와 세계적 조류가 맞아떨어진 기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연동성을 고민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핵심은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의 틀을 공고히 하는 것인 바, 북한의 참여 없는 동북아 평화 구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동북아 평화협력이 북한을 제외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을 관통하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재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가시화되면 기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의 고착화된 구도를 변화시켜 새로운 구도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남·북·러 3자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구도는 협력보다는 갈등의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협력 기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역시 남·북·러 3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3자 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러 3국이 3자 간의 협정서를 바탕으로 <공동관리위원회>와 같은 갈등조정과 위기관리 장치(Instruments)를 마련한다면 다른 현안들의 해결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사전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북한의 무장에 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스배관의 DMZ 통과 문제도 유엔사령부와 미국 등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북핵 문제가 여전히 사업 진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러시아와의 신뢰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의 동쪽 출발점이자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가 유라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¹³² 이 제안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구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 축소,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함께 평화를 지향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수단으로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역내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 등 에너지 협력 확대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구성원의 하나인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망 속으로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대국이자 남북러 가스관 협력의 주요 파트너인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과 양국 지도자들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고위급 정치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양국 안보회의 협의체의 정례 대화에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신뢰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 참여 관련 양해각서 체결, 한반도-시베리아 철도협력에 대한 중장기적 합의는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의 가능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³³

¹³² 더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 2013년 10월 18일,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13.10.20)를 참조.

¹³³ 청와대, “2013년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최종합의문,” 2013년 11월 13일,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13.11.14)

그러나 한·러 정상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북한리스크 및 남북관계의 현실적 상황 상 가스관 사업 재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러시아의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참고문헌

1. 단행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러시아 극동지역 편람. 199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산업자원부. 『100대과제 추진계획. 2001』. 과천: 산업자원부, 2001.

샬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 서울: 삼인, 2003.

에너지경제연구원. 『새천년을 향한 에너지 산업의 도전』.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이윤식.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한종만 외. 『남·북·러 협력사업의 시발점 가스관 프로젝트』. 서울: 푸른길, 2012.

Bohi, Douglas R. and Michael A. Toman with a contribution by Margaret A. Walls. *The Economics of Energy Securit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

Lo, Bobo.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London: Chatham House, 2008.

Martin, William F., Ryukichi Imai and Helga Steeg. *Maintaining Energy Security in a Global Context: a Report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New York: Trilateral Commission, 1996.

OAQ Gazprom. *ANNUAL REPORT 2011*. Moscow: Gazprom, 2011.

Bossuat, Géard. *Les fondateurs de l'Europe*. Paris: Belin, 1994.

Корнеев, А.Г., К.А. Корнеев, и С.И. Виолин. *Основные Механизмы Реализации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Энергетики*.
Регион: Экономика и Социология, спецвыпуск, 2010.

2. 논문

- 권원순·민충기. “러시아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체계와 시베리아 자원 개발.” 『비교경제연구』. 제13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6.
-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 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프랑스사연구』. 6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02.
- 김연규. “중국·러시아 편익의 에너지 동맹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녹색의국제정치학』. No. 4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 김종일·성규열. “사할린을 포함한 극동 러시아지역 자원과 일본의 에너지 경제정책.” 『동북아문화연구』. 제1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김현진. “중국의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안보 전략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석유』. 제22권 1호 (한국석유공사), 2006.
- 김형국·백 훈. “에너지협력제도 구상: 동북아와 유럽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제37집 (한국동북아학회), 2005.
- _____. “다자주의 에너지협력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 남성욱. “북한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전망.” 『국제평화』. 제2권 1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5.
- 류지철·김경술. “에너지 위기와 북한 당국의 대책.” 『통일연구』. 제9권 2호 (숭실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5.
- 박성호. “동북아 지역 내 에너지안보협의체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GRI연구논총』. 제13권 11호 (경기개발연구원), 2011.

- 박재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최진욱 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홍영. “동북아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전망: 협력의 필요성과 갈등요인.”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한국동북아학회), 2006.
- 백 훈.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정책적 접근.”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4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1.
- _____.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시장통합: 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13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6.
- _____. “동북아 에너지협력체를 위한 유럽연합의 교훈.” 『산업경영연구』. 제13권 1호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 2004.
- 안순철.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협력 레짐의 형성: 한국의 다자주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0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 윤성학. “남북러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러시아연구』. 제22권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에너지 사업과 일·중간 협력 가능성 연구: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2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7.
- _____.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 여건과 푸틴 집권 3기의 에너지 수출전략: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4권 2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2012.
-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 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이용권. “북한의 에너지수급과 러시아의 역할-동북아 질서 정착의 모색.”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0집 11월호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 이재승.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EAI국가안보패널 보고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EAI NSP Report 46), 2011.

- 장덕준. “러시아와 동북아 지역협력: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6.
- 정기철. “러시아 가스사업의 여건 변화 및 의미 분석.” 『계간가스산업』. 제7권 4호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2009.
- 제성훈. “러시아 대 중국정책의 지정학적 지향: 2000년대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09.
- _____. “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 정책기조, 변화의 원인, 수행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1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2.
- _____.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 중국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 제성훈·이권형·강부균. “세일가스의 부상과 러시아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주성규.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3권 1호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
-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동북아협력문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 陳菁泉·云曙明. “中俄天然氣合作博奕與發展趨勢研究.” 『俄羅斯中亞東歐研究』. 2011年 6期.
- 藤山光雄. “LNG火力の燃料調達コスト抑制に向けた課題.” *Business & Economic Review*. September 2012.
- 橋本道雄. “日韓エネルギー市場統合: その可能性と効果.” 『산업경영연구』. 제12권 1호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 2004.

- Benedictow, Andreas. Daniel Fjærtøft and Ole Løfsnæs. "Oil dependency of the Russian economy: An econometric analysis." *Economic modelling*. Vol. 32, 2013.
- Choi, Hyun Jin. "Fueling Crisis or Cooperation? The Geopolitics of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36, No. 1, 2009.
- Goldman, Marshall. "Russian Energy: a Blessing and a Curs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3, No. 1, Fall 1999.
- Heisbourg, F. "A New Security Landscape: the End of the Post-Cold War Era." *Asia-Pacific Review*. Vol. 10, No. 1, May 2003.
- Hur, Chang Bae. "A Study on the Reunification between Romania and Moldova within the EU." (M.A.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2.
- Jiankun, He., Yu Zhiwei and Zhang Da. "China's strategy for energy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Energy Policy*. Vol. 51, 2012.
- Menon, Rajan. "Russo-Japanese Relations: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Security." Stephen J. Blank and Alvin Z. Rubinstein. (eds.). *Imperial Decline Russia's Changing Role in As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 Ni, Chun Chun. "China's Natural Gas Industry and Gas to Power Generation." *IIEEJ Energy Journal*. July 2007.
- Popov, V. "Resurgent Russian Economy? Putin's Policy without Putin?." *International*. Vol. 63, No. 2, 2008.

3. 기타자료

『경향신문』.

『매일신문』.

『민중의소리』.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경제』.

『每日新聞』.

『朝日新聞』.

『日本經濟新聞』.

EIA. <<http://www.eia.gov/countries>>.

RFA. <<http://www.rfa.org/korean>>.

Reuters. <<http://www.reuters.com>>.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통일부. <<http://unikorea.go.kr>>.

CNPC. <<http://www.cnpc.com.cn/en>>.

- 김남일.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2011 민화협 화해공영포럼, 2011.11.15.
- 김석환.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구상.”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7.17.
- _____. “남북러 가스관 관련 정책제언.”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평화 협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9.25.
- 김연규. “중국 러시아 편협의 에너지 동맹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녹색의 국제정치학: 핵·에너지·환경』.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년 학술회의, 2011.4.
- 김현진. “Issue Paper-신에너지 위기요인과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3.6.12
- 엄구호.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 가스와 동북아 가스 경쟁.” Online Journal Russia·CIS FOCUS 221호, 2013.6.24.
- 윤석상.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일본의 입장.” 『남·북·러 PNG 사업추진과 대응방향,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일본의 입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9.3.
- 윤익중.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갈등: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 여건과 러·남·북 PNG 사업.”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갈등, 중국·일본 자원외교와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인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5.9.
- 이성규. “남·북·러 PNG 사업추진과 대응방향.” 『남·북·러 PNG 사업추진과 대응방향, 그리고 가스관에 대한 일본의 입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9.3.
- 이유진.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남·북·러가스관 사업의 현황과 해결책』.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4.25.

주재우. “중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석유관과 가스관을 중심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갈등, 중국일본 자원외교와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인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3.5.9.

홍우택.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의 섹 방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1-23, 2011.

김성훈. “세일가스 경제효과 부풀린 미국의 속내.”

<<http://urisociety.kr>>.

American Public Gas Association. “A Brief History of Natural Gas.”

<<http://www.apga.org>>.

Blank, Stephen. “Partnership of Convenience: Understanding Russo-Chinese Relations.” June, 2009,

<<http://www.criticalthreats.org>>.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nergy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 Infographic.”

<<http://www.cbo.gov>>.

Culter, Robert. “Russo-Chinese Energy Ties Structure Strategic Cooperation.” October 28, 2010,

<<http://www.isn.ethz.ch>>.

Gazprom. “Unified Gas Supply System of Russia.”

<<http://www.gazprom.com>>.

Gazprom. “Eastern Gas Program.”

<<http://www.gazprom.com>>.

Haggard, Stephan.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More on the Pipelin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ptember 20, 2011,

<<http://www.piie.com>>.

Murawiec, Laurent. “The Great Siberian War of 2030: A Report
to the Director of Net Assessment.”
<<http://www.dod.mil>>.

“西气東輸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首相官邸. “日本再興戰略: Japan is Back”
<<http://www.kantei.go.jp>>.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한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